

일반 논문

평화학의 진화

: 연원, 계보, 복합화

김성철 (서울대)

국문요약

본고는 평화학을 일방적으로 정의하거나 그 대상을 한정하기보다는 평화학의 사상적 연원을 살펴보고 평화학의 계보와 발전 경로를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칸트(Immanuel Kant), 톨스토이(Leo Tolstoy), 마르크스(Karl Marx)를 평화학의 사상적 원류로 본다. 이들의 사상은 각각 국가중심적, 인간중심적, 구조비판적 접근을 대표하며 오늘날 평화학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 접근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평화 및 갈등의 주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석 대상에 관해서 서로 구분된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론에 근거한 국가중심 접근은 국가가 주체인 가운데 국가 간 전쟁 방지와 국제평화를 주요 과제로 삼는다. 국가중심 접근은 냉전기 케네스 볼딩, 칼 도이치 등이 국가 간 안보협력을 논하면서 공동체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냉전 후에는 구성주의 영향아래 안보공동체 개념을 제시하면서 오늘날 평화학의 중요한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에 사상적 기원을 둔 인간중심 접근은 냉전기 요한 갈통이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의 개념을 제시한 이래 사회적 공정성에 기초한 평화학의 한 흐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접근은 냉전 종식 이후 인간안보 개념을 제시한 이후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고 관련 연구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체제 비판에 연원을 둔 구조비판 접근은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드러나는 갈등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 냉전기에 후기

마르크스주의라 자칭한 신좌파는 사회적 적대관계가 계급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 핵, 생태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생함을 분석하였고, 냉전 종식 후의 좌파 지식계는 마르크스주의("적색")와 생태주의("녹색")를 결합하여 생태사회주의를 제시하게 된다. 평화학의 세 가지 접근은 냉전기에는 각각 분업화된 채 전개되었지만 냉전 종식 후에는 서로 중첩되고 결합하는 복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평화학의 복합화 현상은 보호책임론, 평화구축론,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칸트, 톨스토이, 마르크스, 국가중심 접근, 인간중심 접근, 구조비판 접근, 복합적 평화학

I. 서론

평화는 무엇이며 평화학은 어떤 학문인가? 오랫동안 사람들은 평화를 전쟁 없는 질서라고 생각해왔다.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시니카 등의 용어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평화를 전쟁 부재로 정의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전쟁은 없지만 평화적이지 않은 상태, 즉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거나 다른 유형의 폭력이 잠재해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할 수 없다.

평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 이외에 갈등, 폭력 등 평화와 대척되는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갈등은 "힘과 등나 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인데,¹⁾ 평화를 위해서는 갈등이 폭력이 아닌 방식으로 해소되는 수단과 공간이 존재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갈등 대 평화의 구도를 보는 연구자는 갈등 없는 인간관계란 존재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달리, 폭력을 평화와 대척되는 용어로 설정하면 그 폭력의 형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평화를 위해서는 도려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폭력 대 평화의 구도를 보는 연구자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하거나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냉전기 평화학의 정립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과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각각 갈등과 폭력을 분석하였다. 볼딩은 평화·갈등의 역학관계를 규명하면서 과학화를 강조하였던 반면, 갈통은 평화학을 모든 형태의 폭력에 저항하는 규범적, 실천적 학문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평화상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평화에 이르는 조건을 탐구하는 데 평화학의 목적이 있다는 데는 동의했다.

평화학의 대상에는 행위 주체인 집단, 국가, 국제조직뿐만 아니라 갈등과 폭력의 유발 요소인 구조, 문화, 기술, 재난 등도 포함된다. 또한 실천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정부 정책 및 제도, 국제 협약도 연구대상이 된다. 개인 간의 분쟁 그 자체는 연구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이 집단적 억압, 차별, 공포, 위협의 결과라면 분석 대상이 된다. 이처럼 광범위한 대상을 다루는 평화학은 다학제적이어야 하는 바, 기존의 사회과학의 분과학문들 사이의 융합은 물론 인문학적 사유와 문제의식과도 접합되어야 할 것이다.²⁾

이 글은 평화학을 일방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평화학의 사상적 연원을 살펴보고 평화학의 발전 경로와 계보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칸트(Immanuel Kant), 톨스토이(Leo Tolstoy), 마르크스(Karl Marx)

²⁾ 박명규, 「지금 왜 평화인문학인가」, 서울대학교 평화인문학연구단 편,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13), 15쪽.

를 평화학의 사상적 원류로 본다. 이들의 사상은 각각 국가중심적, 인간 중심적, 구조비판적 접근을 대표하며, 이 세 가지 접근은 평화학의 진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 접근은 모두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평화 및 갈등의 주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석의 대상에 관하여 서로 구분된다. 냉전기에 이들 세 접근은 각각의 사상적 연원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진화하여 일종의 분업 형태를 이루었다. 냉전 종식 이후 세 접근은 독립성을 유지되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넘어 중첩되고 결합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복합성의 생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표 1>은 각 접근의 사상적 연원, 계보, 그리고 복합성을 표시해 주고 있다.

<표 1> 평화학의 진화

	국가중심 접근	인간중심 접근	구조비판 접근
사상적 원류	칸트(1724-1804)	톨스토이(1828-1910)	마르크스(1818-1883)
냉전기 평화학의 정립	통합·공동체론 민주평화론	적극적 평화	사회변혁론
냉전 종식 후 평화학의 복합화	안보공동체론	인간안보론	생태사회주의
	보호책임론		
	기후변화 대응		

필자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레오 톨스토이(Leo Tolstoy), 칼 마르크스(Karl Marx)를 평화학의 사상적 원조로 보는 데는 W. B. 갈리(W. B. Gallie)의 저서 『평화와 전쟁의 철학자들: 칸트, 클라우제비츠, 마르크스-엥겔스, 톨스토이』³⁾에서 영감을 받은 바가 크다. 이 책은 갈리가

3) W. B. Gallie, *Philosophers of Peace and War: Kant, Clausewitz, Marx Engels and Tolsto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1976년 벨파스트 소재 퀸스대학교의 와일즈강의(Wiles Lectures)에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평화와 전쟁에 관한 철학자들의 주요 저작을 해제하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갈리의 분석과는 달리, 필자는 군사전략가인 클라우제비츠를 빼고, 세 명의 사상가들의 논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갈리는 마르크스를 마르크스-엥겔스-레닌으로 이어지는 혁명과 전쟁에 관한 사상가로 보았지만, 본 필자는 그를 자본주의의 구조를 비판한 사회과학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자 한다. 실로 칸트, 톨스토이, 마르크스는 각각 국가, 인간, 구조비판 차원에서 독자성과 개별성이 두드러진 접근을 제시하였으며, 더 중요하게는 평화학의 인식 확장과 연구대상 확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아이디어와 이론은 지금도 확장될 뿐만 아니라 서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창출하고 있다. 오늘의 평화학은 이들의 사상이 진화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론에 근거한 국가중심 접근은 국가가 주체인 가운데 국가 간의 전쟁 방지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으며 이를 위한 국가 간 연대 또는 공동체를 분석한다. 냉전기 케네스 볼딩, 칼 도이치 등이 국가 간 안보협력을 논하면서 공동체의 개념을 주요하게 다룬 이래 오늘날도 여전히 국가중심 접근은 평화학의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국가중심 접근에서는 체제(레짐)의 속성도 분석 대상이 되어 민주평화론으로 태어나기도 했다. 냉전 종식 후에는, 강대국들이 사이버와 핵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서 고전적 의미의 주권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협 및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중심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에 사상적 기원을 둔 인간중심 접근은 국가가 아닌 개인들의 안전과 평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가와 개인의 평화가 상충하는 경우 개인의 평

화가 우선한다. 냉전기 요한 갈통이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의 개념을 제시한 이래 사회의 공정성에 기초한 평화학의 부류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접근은 냉전 종식 이후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이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 의해 제시된 이후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어 연구대상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인간안보는 욕구로부터의 자유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의 두 가지 연구 방향으로 나누어져 발전해왔다. 욕구로부터의 자유는 빈곤과 차별을 극복하는 “개발에 바탕한” 인간안보인 반면,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는 반인권적, 반인도적 살상과 위협에 대응하는 “보호에 바탕한” 인간안보이다. 전자는 인간개발지표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는 데 공헌한 반면, 후자는 자국민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보호책임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에 연원을 둔 구조비판 접근은 사회적 갈등 구조와 이것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 냉전기에 후기마르크스주의라 자칭한 신좌파는 적대관계가 전통적 계급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전후 세대의 가치변화로 인해 인권, 핵, 생태 등 다양한 문제에서 발생함을 분석하였고, 냉전 종식 후의 좌파 지식계는 마르크스주의(“적색”)와 생태주의(“녹색”)를 결합하여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를 제시하게 된다.

이 글은 평화학의 세 가지 접근이 냉전기에는 각각 분업화된 채 전개되지만, 냉전 종식 후에는 점차 복합성을 띠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복합성은 평화갈등에 관여하는—그리고 평화를 설명하는—다양한 요소들이 독립적이거나 고립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복합성을 띠게 된다는 것은 개방성과 연계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불확실성을 보이게 됨을 말한다. 개방성은 각 요소가 폐쇄적이지 않아 서로 부추기고 피드백을 일으키는 속성이며, 연계성은 개방성으로 인해 각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의존성(대부분 비대칭적 의존)을 가지는 속성이다. 연계성은 예측이 용이

하지 않는 결과, 즉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불확실성은 복합체 계론에서 흔히 초기조건에 민감성, 자기조직화 등의 개념과 연계되어 설명되고 있다.

복합성은 여러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는 상태로부터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까지를 말한다. 오늘날의 재난은 복합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과거 인간이 겪었던 재난은 홍수, 가뭄, 역병과 같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인류는 이런 재난을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오늘날의 재난은 자연변화, 산업화, 기술발전, 인간실수 등이 서로 결합되어 대응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변화만이 아니며 산업화가 더해진 결과인데다, 산업사회의 소비양식,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 등으로 인해 그 해결이 과거의 자연재해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일종의 복합재난이 된다.

II. 평화학의 사상적 원류

칸트, 톨스토이, 마르크스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에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 이들은 각기 독창적인 사상으로 평화, 폭력, 갈등의 원인을 논하거나 평화에 이르는 원리를 논하였다.

1. 칸트의 국가중심 접근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계몽주의의 대미를 장식

하는 프리시아의 철학자로서 일흔 한 살 때인 1795년 말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한 철학적 기획』(이하 『영원한 평화』 호칭)라는 팜플렛 형태의 소책자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국가를 중심에 두고 국가 간 평화를 논한 것으로, 특히 공화정과 연방에 관한 논의는 평화학의 원류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는 개인적으로는 유럽에서의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성찰하고 절대왕정의 폐해를 목격하면서 쓴 책이며, 인식론적으로는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등 이전의 대표적 저작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부제로 쓴 “철학적 기획”은 바로 초월적 원리를 의미하는 바, 인간의 순수이성에 근원을 둔 선험적인 것이면서 경험적인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다. 또한 초월적 원리는 순수한 인간 이성에서 발원한 도덕적 원칙이면서 현실의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원리, 곧 정치의 도덕과의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기도 하다.⁴⁾

칸트가 말하는 영원한 평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평화라기보다는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원리이다. 영원한 평화는 인간의 도덕적 원칙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이룩해야 할 목표인 동시에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할 점진적인 과정이다. 칸트 전문가인 백중현이 지적하듯이, 칸트는 실제로 화(和)를 진, 선, 미, 성 보다도 더 높은 가치로 보고 이성적 동물인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최고선”이라고 간주한다.⁵⁾

칸트는 『영원한 평화』에서 여섯 가지의 예비조항과 세 가지의 확정조항을 제시한다. 이들 조항은 국가 간 전쟁을 회피하고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건들로서, 간명하면서도 철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

먼저 예비조항은 위장 평화조약 금지, 국가의 상속 및 매매 금지, 상비

4) 임마누엘 칸트, 백중현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한 철학적 기획』 (파주: 아카넷, 2013), 23쪽.

5) 위의 책, 21쪽.

군 폐지, 국가부채 금지, 내정간섭 금지, 암살, 독살 등 적대행위 금지 등이다. 예비조항은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국가 간에 지켜야 할 약속과 같은 것들이다. 이들 예비조항은 “예비”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프리시아가 처한 그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다. 1795년 4월 바젤협약(Treaty of Basel)에 의해 프리시아는 프랑스와 라인강 주변 국경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대(對)프랑스동맹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반면, 동년 10월 오스트리아 및 러시아와 함께 폴란드를 최종 분할 지배하여 폴란드라는 국가를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바로 그 시점에 출판된 『영원한 평화』의 예비조항, 특히 국가의 매매, 내정간섭 금지 같은 조항들은 당시 어느 프리시아인도 감히 언급하기 힘든 내용이였다. 이런 이유로 『영원한 평화』 1판은 대중적 인기 속에 몇 주 만에 완판되었고 2판은 이듬해 초에 출판되었다.⁶⁾

『영원한 평화』의 세 개의 확정조항은 그야말로 평화에 관한 보편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제1확정조항은 “각 국가에서 시민적 (헌정)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고 하여, 공화정이 타 체제보다 더 평화적이라고 설명한다. 칸트는 공화정이 “근원적 계약의 이념에서 나오고 한 국민의 모든 법적인 법칙수립이 그에 기초해 있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체제”라고 말한다. 공화정은 행정권(정부)이 입법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체제로서, 군주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권력 독점적인 전제정과 다르다.

공화정에 대한 칸트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계약론의 사상적 흐름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홉스, 로크, 루소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칸트도 사람들이 실제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

⁶⁾ W. B. Gallie, *Philosophers of Peace and War: Kant, Clausewitz, Marx Engels and Tolstoy* pp. 8-10.

만 칸트는 국가가 마치 시민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 것처럼 생각되어야 한다고 파악하고, 시민이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국가가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계약론을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효율적인 통제의 원리로 파악한 것이다.⁷⁾

공화정이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해 칸트는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국가시민들의 동의가 요청될 때, 국가시민들은 그들에게 닥칠 전쟁의 모든 고난들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토록 고약한 놀이를 시작하는 것에 신중하리라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고 말한다.⁸⁾ 공화정에서는 시민적 의지가 전쟁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잘 반영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절대군주정에서 군주는 국가구성원이 아닌 국가의 소유자이면서도 전시에 자기의 별궁, 연회장, 식탁 등을 잃지 않으므로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전쟁에 대한 책임은 외교관리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제2확정조항은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에 기초해 있어야만 한다”로서, 칸트는 여기서 국가 간 평화를 위한 장치에 대해 설명한다. 칸트가 말하는 연방은 가입, 탈퇴가 자유롭고 느슨한 형태의 결합체이다. 연방은 국가보다 상위의 주권을 가지지 않는다. 즉, 연방은 국가보다 상위 개념이 아니다. 연방은 세계의 모든 국가에 주권을 행사하는 세계국가와 같은 존재가 아닌바, 이는 국가를 초월하는 통치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공법의 효력이 미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칸트는 각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는 바, 그가 말하는 국

7) Woldemar Oskar Döring, *Das Lebenswerk Immanuel Kants* (Hamburg: Hamburger Kulturverlag, 1964), W. O. 뢰에링, 김용정 역, 『칸트철학 입문』 (서울: 중원문화, 2012), 236쪽.

8) 임마누엘 칸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한 철학적 기획』, 118쪽.

가는 결국 민족국가이며 민족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독립적 주권이다. 그는 다수의 민족이 하나의 주권적 결합체에 속하고 하나의 국민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연방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느슨한 평화 매개체일 수밖에 없다.⁹⁾

칸트의 연방이론은 기존에 제안된 국제법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칸트는 자연상태에서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시민법의 논리가 국가 간 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는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ous),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에머릭 드 바텔(Emmerich de Vattel) 등 국제법학자들을 비판한다. 칸트는 “철학적으로 내지는 외교적으로 작성된 그들의 법전이 최소한의 법칙적 효력을 갖지도 못하고 가질 수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전쟁도발의 정당화를 위해 인용되고 있다”고 말한다.¹⁰⁾ 칸트는 당대의 국제법이 국가의 침략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간파하고, 실효성 없는 국제법이 오히려 전쟁을 합리화한다고 비판한다.

칸트가 제안한 연방이 “자유로운 국가”들의 느슨한 결합이라면 전쟁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하지 않은가? 칸트가 당대 국제법의 한계를 지적하였지만 자신의 연방이론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연방이론에 대해 헤겔 등 후세의 사상가들은 강제력이 없는 소극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¹¹⁾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이 여기에 속한 국가 간에는 구속력을 가지겠지만, 연방에 불참하거나 탈퇴한 국가들과 연방 소속국들이 전쟁을 하거나 연방 대 연방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칸트가 당면한 딜레마였을 것이다.

칸트는 이 딜레마에 대해 공화정에 의한 평화의 확산효과로 대응하는

9) 위의 책, 124~125쪽.

10) 위의 책, 126~127쪽.

11) 김범수, “칸트의 자유개념과 평화론,” 『국제정치논총』 59권 3호 (2019), 7~54쪽.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화정이 국가 간의 관계, 특히 연방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다행히도 한 강력한 계몽된 민족이 하나의 공화국을 형성할 수 있다면, 이 공화국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연방적 통일의 중심점을 제공하여, 다른 국가들을 그 통일에 동참하게 하고, 국제법의 이념에 맞게, 국가들의 자유상태를 보장하고, 이러한 방식의 더 많은 결합을 통해 점점 더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¹²⁾ 하나의 강력한 공화정은 그 자체로서 국가 간 평화를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타 국가들의 연방을 유도함으로써 평화를 확산하는 효과도 지닌다는 것이다.

제3확정조항은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하여, 국가 간 방문, 교류의 의미를 밝힌다. 보편적 우호란 외국인이 어떤 타국의 영토에서 적대적으로 취급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칸트의 논리는 지구가 인류의 공동점유이며 여기에의 방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우호는 인간애라기보다는 권리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¹³⁾ 유의할 것은 보편적 우호가 권리에 근거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주권에 도전할만한 정도는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민족의 개별성에 기초한 국가 주권은 외국인이 섞여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는 구실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칸트의 평화론이 국가 간 관계에 기초를 두었던 만큼 이후 국가중심의 평화학의 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리하자면, 첫째, 국가를 최상, 최종의 주권이라는 전제 하에서 국가 간 연방이 평화의 조건이라고 주장한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홉스의 자연상태를 무법적 전쟁상태로 보는 입장을 따르는 동시에, 계약에 의해 공법적, 평화적 관계로 전환

12) 임마누엘 칸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한 철학적 기획』, 129쪽.

13) 위의 책, 132~133쪽.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 간의 연방이 결코 국가를 추월한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칸트에게는 국가 내 시민사회의 구성원리와 국가 간 연방의 구성원리가 다르다. 국가 주권을 능가하고 이를 속박하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써 국가는 자유로운 주체이다. 오늘날 현실주의가 보는 국가는 칸트의 이런 국가중심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둘째, 국가의 정체 또는 레짐이 국가의 대외관계에서의 방식을 좌우한다는 관점은 오늘날 자유주의적 설명, 특히 민주평화론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칸트가 공화정을 내세우는 이유는 국가 내부에 국가 간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적 관계를 원하는 사람 또는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있다. 공화정의 내부에서 친평화적 원리의 작동이 결국 공화정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을 거부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칸트는 국가가 평화의 권리와 전쟁의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고 보면서도 그 같은 권리들이 전쟁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안도 한다. 그는 국가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중립의 권리, 보증의 권리, 동맹의 권리를 가지며, 직접적 침략을 막거나 균형을 깨뜨리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또 침략당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어전쟁의 권리도 가진다. 그러나, 그는 이런 권리들은 국가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막기보다는 자극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설명에서와 같이, 한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지나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결국 국가 간 무력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칸트는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상비군의 폐지”를 주장하는 바, 상비군이 인간을 전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군축 또는 군비통제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칸트가 민족국가의 개별성을 강조하면서도 문화의 접촉이 궁극적으로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각 민족의 문화가 성장해 가고 서로 점진적으로 접근해 감으로써 평화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간다고 본다. 그가 문화의 역동성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평화과정에서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 틀림없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될 때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도 동시에 창설된 것은 문화의 역할을 역설한 칸트의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톨스토이의 인간중심 접근

레오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는 작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그의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 치하 프랑스와의 전쟁을 묘사한 역사소설로서 전쟁에서의 애국심, 명예, 인생, 사랑을 묘사한 예술적 가치로 잘 알려져 있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집필하기 직전에는 러시아의 자유주의 청년 장교들의 비밀단체인 데카브리스트를 주제로 소설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는 그가 서구 자유주의 흐름과 프랑스혁명 이후의 사건 전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¹⁴⁾

작가 이외에 톨스토이가 평화사상가라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¹⁵⁾ 그러나 그의 평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만년의 저작들에서 발견된다. 그가 50세가 되던 1878년 『고백록』을 집필한 이후 인간중심의 평화사상은 무르익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톨스토이는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에 대해 반성한다.

14) 레프 톨스토이, 박형규 역, 『전쟁과 평화』 (서울: 범우사, 1997)의 해제 부분 참조.

15) 톨스토이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저서로는 이문영, 『톨스토이와 평화』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6) 참조.

솔로몬, 쇼펜하우어와 나는 삶의 문제를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대답에는 그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를 제외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모두 아직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통찰하지 못한 사람들에 속한 자들이라고 단정하고서...[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아주 명쾌한 대답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과 현자들이 이성에 기초해서 제시한 지식은 삶의 의미를 부정했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인류 전체의 삶의 의미는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성에 기초한 지식의 길을 따라가서는 삶을 부정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신앙 속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성을 부정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¹⁶⁾

여기서 톨스토이가 이성의 힘을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해서 프리드리히 니체처럼 계몽주의 철학의 이성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고백의 핵심은 자신의 지적 자만을 성찰하고 보통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간다고 깨달은 데 있다. 만년에 그의 관심은 일반 대중에게로 옮겨져 그들의 삶이 국가 및 종교의 제도적 폭력과 왜곡된 여론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비판하는 데 모아진다.

톨스토이는 국가제도, 경제제도, 종교제도, 국제협정 등을 인간에 대한 폭력 그리고 국가 간 전쟁의 근원으로 파악한다. 또한 여론과 애국심은 보통 사람들을 전쟁의 격랑에 몰입하게 하는 잘못된 이념이라고 지적한다. 그의 사상이 기존 제도와 이념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에서 아나키즘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단호히 거부한 것은 당대의 아나키스트들의 행태와 다르다. 더욱이 그가 모한다스 간디(Mohandas Gandhi)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비폭력의 뜻을 함께 하고

16) 레프 톨스토이, 박문재 역, 『톨스토이의 고백록』 (파주: 현대지성, 2018), 67-71쪽.

있음이 밝혀져 있다.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는 후일 요한 갈통이 오슬로 평화연구소를 세우고 비폭력주의를 주창하고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라는 제목의 저작을 썼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먼저, 톨스토이는 1882년 “교회와 국가”(Church and State)라는 제하의 글에서 기독교 국가(Christian state)라는 용어가 “뜨거운 얼음”이란 말처럼 모순적이라고 규정한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 그 자체이므로, 기독교 국가란 종교가 폭력과 동맹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¹⁷⁾ 그는 지난 천 오백년 동안 지탱된 기독교와 국가 사이의 연합은 종식되어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러시아에서 국가와 종교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대중에 대한 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가는 군대와 경찰을 폭력도구로 삼으며 전쟁을 위한 병역의무와 징세를 정당화하고 전쟁에의 대중 동원을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한다. 교회의 사제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 특권을 누리며 대중을 희생시키는 데, 특히 이들은 국가통치를 신성화하고 폭력적 지배를 정당화한다. 톨스토이의 비판에 대해 교회는 그를 거짓 설교자라면서 파문하기에 이른다.¹⁸⁾

톨스토이는 애국심이라는 잘못된 여론(public opinion)이 어떻게 대중을 국가 간 전쟁의 희생자로 만드는지 보여준다. 1894년 “기독교와 애국심”(Christianity and Patriotism)과 1896년 “애국심인가 평화인가”(Patriotism or Peace)라는 글에서 애국심이 평화와 공존 불가능한 잘못된 여론임을 지적한다.¹⁹⁾ 애국심은 짜르, 국가, 종교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타 국가에 대해 폭력, 전쟁을 자행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톨스토이

17) Leo Tolstoy, *The Spiritual Works of Leo Tolstoy* (Prague: e-artnow, 2016) (trans. by Leo Wiener, Constantine Popoff, Louise Maude, Aylmer Maude, V. Tchertkoff, Nathan Haskell Dole), Kindle Edition, pp. 983-987.

18) 이문영, 『톨스토이와 평화』, 15쪽.

19) Leo Tolstoy, *The Spiritual Works of Leo Tolstoy*, pp. 728-787.

는 러시아가 나폴레옹 전쟁(1803-1815) 시기에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와 혈전을 벌였는데 1894년에는 러불동맹을 맺고 애국심에 호소하며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에 대항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톨스토이는 애국심을 국가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조장하는 여론이라고 본다.

톨스토이에게는, 애국심이란 국가, 종교, 학계, 출판계의 합작품이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 애국심을 잊고 살았던 러시아인들에게 통치자가 성직자들과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애국심을 조장한다. 통치자는 자신의 지위와 수단을 이용해 애국심이 마치 위대한 도덕적 정서이며 자기 민족과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미화하면서 대중 사이에서 일종의 흥분상태를 일으키게 한다.

톨스토이는 잘못된 여론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을 여기에서 구출하는 기획을 시도한다. 그는 애국심 같은 여론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면서, 새로운 연대를 위해 옳은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옳은 여론을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간이 소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천만 루블이나 백만 대군 또는 혁명보다도 위대하다고 말한다.²⁰⁾

옳은 여론의 형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톨스토이는 인간의 의식과 자각을 중요시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면서 내적 생활양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국가의 통치자들은 인간의 독립적 생각과 그 표현을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보며 군대보다도 더 두려워한다. 정부가 검열을 행하고 종교계, 언론사, 학계의 인사들을 매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의식의 깊숙한 곳에 내재한 영적인 힘이 결국 옳은 여론의 근원이라고 파악한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의식은 제

20) 위의 책, p. 785.

도로서의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서의 기독교에서 발현하며, 의식있는 인간은 자유롭고 교양을 지닌 인간적인 기독교인이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대중의 힘과 그 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톨스토이를 평화사상가로 볼 때 그의 모든 주장은 비폭력주의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거 직전 1909년의 “힌두에게 보낸 편지”(A Letter to a Hindu)와 “간디와의 교신”(Correspondences with Gandhi)은 그의 비폭력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²¹⁾ 그가 주장한 것은 전제군주의 축출 또는 개혁 명분의 폭력이 결코 아니다. 톨스토이는 징집, 과세, 경찰과 같은 국가의 제도적 폭력이 악이므로 이런 제도에 참여를 거부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민불복종보다도 더 적극적인바, 선택적인 불복종 대신에 국가의 모든 제도와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톨스토이는 폭력 자체가 악이므로 악에 대한 폭력은 악을 다른 악으로 교체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당시의 아나키즘이 국가 전복을 위해 혁명을 기도했던 것과 다르다.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에서는 신앙심과 인간애가 강조된다.

톨스토이의 사상을 요약하자면, 국가 주도의 폭력은 종교, 지식, 언론, 출판들과의 결합에 의해 정당화되며 이에 대한 저항은 대중의 의식과 자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후일 평화학의 진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가 “인간중심”의 아이디어라는 점이다. 비폭력주의는 톨스토이 이외에도 모한다스 간디, 요한 갈통, 마르틴 루터 킹 등에 의해 주창되는데, 이들의 사상은 인간의 생명이 지고의 가치를 지니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위에 둔다는 데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사랑은 기독교적 신앙에서 비롯되던

²¹⁾ Leo Tolstoy, *The Spiritual Works of Leo Tolstoy*, pp. 796-909.

서도 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왜곡된 여론, 특히 애국심에 관한 톨스토이의 논의가 이후 갈통의 이른바 “문화적 폭력” 및 “구조적 폭력” 개념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²²⁾ 국가는 종교 및 지식과 결탁하여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그 같은 폭력의 잠재성을 은폐하려 한다. 대중은 직접적 폭력에 의해 희생됨은 물론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배계급에 의해 일종의 흥분상태에 빠뜨려지는 지적, 도덕적 피해자가 된다.

셋째는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인간의 지적, 도덕적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톨스토이가 인간의 의식과 자각 능력이 폭력적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보았는 바, 이는 갈통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이기도 하고 오늘날 인간안보에서 논하는 “인간개발”이기도 하다. 적극적 평화와 인간개발은 교육, 보건의료, 성평등, 시민사회 등을 통해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높여 차별과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3. 마르크스의 구조비판 접근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판이론가로 통하며, 그의 사상은 사후에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오늘날도 사회이론과 운동원리로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는 사적유물론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갈등을 지적하며 그 갈등에 의해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²²⁾ 이문영, 『톨스토이와 평화』, 57쪽.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평화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본주의 비판의 논리이다. 실제 그는 혁명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화를 해친다고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르크스의 이 같은 분석은 비판적 평화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마르크스가 사회변화를 보는 거시적 관점은 사적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다. 사적유물론은 유토피아 사회주의자 앙리 드 상시몽(Henri de Saint-Simon)이 공식화한 것으로, 역사의 발전 단계를 기술력과 조직의 발전에 따라 노예제, 봉건제, 임금노동제로 구분한다. 마르크스는 1859년 출간한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의 서문에서 역사변화의 원인에 관한 유물론적 해석을 내린다.²³⁾ 각 역사적 단계에서 사회적 관계는 한마디로 생산관계(relations of production)로 요약되는데, 이 생산관계는 물리적 힘이며 기반인 생산력(forces of production)에 상응하여 형성된다. 생산관계는 소유-비소유, 고용-피고용, 지배-피지배의 관계로서, 이 관계의 총합이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구성한다. 토대는 이른바 상부구조인 법, 정치, 의식 등을 결정한다. 즉,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력이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면 현존하는 생산관계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바, 사회적 격변, 이른바 혁명을 맞게 된다. 생산력의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술의 발전일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생산관계는 임금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특수한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이 사회적 관계는 1844년의 『경제학철학 수고』(*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와 1849년 『임금노동과 자본』(*Wage-Labor*

²³⁾ David McLellan, ed., *Karl Marx: Selected Writi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p. 424-428.

and Capital)에 비교적 쉽게 설명되어 있다.²⁴⁾ 1844년의 저작은 이후 마르크스의 저작들이 그것의 재작업, 수정, 발전, 확장이라 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849년 저작은 마르크스가 브뤼셀의 노동자 클럽에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그의 역작 『자본론』(*Capital*)의 기본 명제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르크스는 노동을 노동자의 삶의 활동인 동시에 그것의 표현이라고 본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은 타 상품의 가격이 수요·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는 상품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 힘들 정도인 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해 나간다는 점이다. 자본가는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보다 큰 공장과 기계들을 사들인다. 영세사업가들은 설 땅을 잃게 되어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고, 임금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임금은 점점 더 낮아진다. 마르크스주의를 정리한 피터 싱거(Peter Singer)는 이런 주장이 고전경제학에서 유추된 것으로 마르크스가 새로운 경제학을 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²⁵⁾ 마르크스가 고전경제학을 거부하는 핵심 주장은 노동의 소외(alienation of labor)를 설명하는 데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자신의 노동이 대상이 되고 외재적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밖에 생경한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노동자 자신을 적대하는 힘이 된다. 노동자가 대상에 부여했던 생명이 자신을 적의적이고 생경한 것으로서 적대한다.”²⁶⁾ 즉, 노동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만들게 되는

²⁴⁾ David McLellan, ed., *Karl Marx: Selected Writings*, pp. 83-121, 273-294.

²⁵⁾ Peter Singer, *Marx: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 32.

²⁶⁾ David McLellan, ed., *Karl Marx: Selected Writings*, pp. 77-87.

데 이는 노동의 결과가 자본가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강제적인 상황에서 생산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고전경제학자들처럼 자본은 원료, 도구, 기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노동의 결과물이므로 자본은 곧 노동의 축적이라고 본다. 마르크스가 고전경제학자들과 다른 점은 노동의 축적이 자본이 되는 과정이 부르조아사회라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노동의 축적이 자본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이 시장이라는 제도에 의해 타 상품과 바꾸는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교환가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주요한 용어로 사용가치와 대비된다. 예를 들어, 오백 그램의 설탕의 사용가치는 단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힘인 반면, 그것의 교환가치는 일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 감자 이 킬로그램으로 교환되는 가치이거나 또는 만원이라는 화폐일 수 있다. 사용가치가 시장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가치인 반면, 교환가치는 시장이 존재함으로 인해 인정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상품이 직접적인 사용보다는 교환을 위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서 상품 생산은 교환가치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그 상품은 익명성을 지닌 시장을 통해서 타인에게 사용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사용가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²⁷⁾

자본은 상품의 총합, 교환가치의 합이다. 자본가는 임금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후자는 고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 임금노동자와 자본가의 이익이 상충하게 된다. 설사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자의 생활은 자본가의 그것에 비해 더 열악해진다. 반면, 생산력의 발전, 특히 기술의

²⁷⁾ Ben Fine, *Marx's Capital* (London: Macmillan, 1989), p. 10.

발전으로 자본가는 동일한 임금노동(또는 경쟁으로 인한 하락한 임금노동)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최저생계를 유지하면서 재생산에 기여하면 할수록 자본가는 노동자로부터 잉여가치(surplus value)를 축출하게 되고 자본은 더욱 확장된다. 자본가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관계는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된다. 사적유물론에서 언급했듯이, 생산력 발전은 결국 생산관계와 갈등을 초래하게 되며 노동자계급이 구조적 변혁 즉 혁명의 주체가 된다는 설명에 이른다.

마르크스의 사상을 혁명이론이라고 본다면 평화학과 관련된다고 말하기 힘들다. 마르크스 자신도 자신의 연구를 평화와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적 사고는 사회적 갈등의 구조적 분석 원리로서 여러 사회과학 분야의 비판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비판적 평화학의 단초를 제시하였다. 그의 사상은 재해석되어 냉전기 신좌파 또는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사회변혁론과 오늘날 생태사회주의 논의로 진화하였다.

냉전기 신좌파는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 내적대구조의 변화에 대해 주목했다. 신좌파 이론가들은 전후 자본주의에서 계급적 적대는 물론 경제 이외의 다양한 주제들—예를 들어, 핵, 인권, 생태, 성평등 등—을 중심으로 한 적대의 형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요한 갈통은 빈곤, 차별, 억압 등의 구조적 폭력 개념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에서 비롯된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비판에 의해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단, 갈통은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로 간주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냉전기 동서 이데올로기 경쟁 속에서 혁명지향적인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냉전 종식 후 마르크스주의의 기여는 자본주의 및 산업사회 발전의 결

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분석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자연생태의 파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마르크스가 지적하였던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자본축적을 위한 소비의 조장 및 확장은 자연파괴와 온난화를 촉진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디게 하기도 한다. 아무튼 마르크스는 평화학에서 비판적 연구를 고무하고 촉진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런 발전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이론은 배제되었다.

Ⅲ. 냉전기 평화학의 정립

19세기와 20세기 전반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나폴레옹 전쟁은 물론 그 이후 영, 불, 러, 일 등 제국들의 식민지 전쟁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인류는 과연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핵무기는 미증유의 파괴력을 보였으며, 곧 이어 전개된 미소 간의 핵무기 경쟁은 인간의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이었다. 만일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반세기에 걸친 냉전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치열한 우위 경쟁이었다. 이 경쟁은 냉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아시아에서의 두 전쟁으로 인해 약 오백 오십만 명의 전사자를 발생시켰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그것이다.

미소 경쟁 속에서도 서구의 선진국가들에서는 사회변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950년대에는 반핵이 운동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반핵은 물론 반전,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주제가 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신사회운동이라 불리는 새로운 운동의 흐름은 서구사회 내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변화를 더욱 촉진하기도 하였다. 신사회운동은 더욱이 1970년대 동서진영 간 데탕트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²⁸⁾

신생독립국들에게 냉전의 역사는 전쟁 위협은 물론 억압과 빈곤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역사였다. 이들 국가는 미소 간의 쟁취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상당수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집단기억 때문에 비동맹연대의 길을 택했다. 비동맹은 약소국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던 것이 사실이나, 비동맹 소속 국가들은 독재와 저발전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냉전은 역설적으로 평화·갈등연구를 촉진하였으며 비판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에 평화·갈등연구가 이론과 개념을 갖추면서 다학제적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냉전기 선각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평화·갈등에 관한 연구는 평화학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게 되었다.

냉전기 평화학은 국가중심, 인간중심, 구조비판 접근에 따라 통합·공동체론, 적극적 평화론, 사회변혁론으로 구분된다. 세 가지 접근은 서로 다른 인식론을 기반으로 분업화된 채 별개로 발전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분업화가 발생한 이유는 동서 이데올로기 경쟁으로 인하여 세 접근 사이에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통합·공동체론의 선구자인 케네스 볼딩과 적극적 평화론자인 요한 갈통 사이에 다소의 대화가 예외적으로 있었을 뿐, 이론적 결합으로 인한 제3이론의 개발은 없었다. 더욱이 적극적 평화론과 사회변혁론 사이에서 직접적 대화는 없었다. 갈통

²⁸⁾ 1960년대 말의 전 세계적인 급진적 사회운동이 데탕트에 기여한 설명에 대해 Jeremi Suri, *Power and Protest: Global Revolution and the Rise of Deten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참조.

의 적극적 평화론은 일부의 마르크스주의 시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갈통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극구 부정하였다.

냉전기 평화학의 분업화는 결국 평화학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은 셈이다. 예를 들면, 평화학이 가치중립과 경험적 분석에 기초한 사회과학의 하나여야 하는지, 가치판단에 주저하지 않으며 실천과 결합하는 규범학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운동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비판이론이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이다. 그런데 각 접근의 이론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합·공동체론은 평화와 갈등 연구를 사회과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었고, 적극적 평화론은 가치판단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신좌파의 사회변혁론은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하면서 평화학의 비판적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통합·공동체론

통합·공동체론은 국가중심 접근에 기반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 칼 도이치(Karl Deutsch), 디터 쟁하스(Dieter Senghaas)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공동체 개념은 의식공유와 의사소통을 강조함으로써 칸트가 제안한 연방 개념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인 성격을 띤다. 이와 함께, 냉전 말기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민주평화론은 칸트의 공화정론에 근거해 민주주의 국가 간 무력갈등의 부재를 설명하였다. 아무튼 냉전기 이들 선구적인 연구자들은 평화학을 과학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학문적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냉전 초기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신생 독립국들에게 국민의 생존과 국가주권의 보존을 위해 국가안보가 주요 의제였으며, 이런 맥락에서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국가안보와 국가 간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전략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전략연구는 이른바 핵혁명(nuclear revolution)

에 의해 전쟁 개념이 전면적으로 변화된 것과 관련된다. 이전의 전쟁에서는 방어와 공격의 합으로서 승패가 좌우되었지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핵전쟁에서 승리는 무의미하며, 따라서 어떻게 핵전쟁을 방지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되었다. 군축, 억제 등에 관한 전략연구는 합리성에 근거하면서 과학적 추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론의 발전은 지속적인 기술발전에 의해 상쇄되었다. 예를 들어,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를 통해 핵전쟁을 억제하려는 논리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미사일 기술의 진전으로 군비경쟁은 가속화되어 갔다.

통합·공동체론은 이상의 전략연구와 경쟁하면서도 일부 중첩되면서 전개되었다.²⁹⁾ 한편으로 국가안보—또는 국제안보라는 이름으로—에 충실한 전략연구가 자국 중심적이어서 평화학에게는 불편한 존재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 전략연구와 평화학은 핵경쟁을 포함한 국제적 갈등을 방지하려는 목표에는 일치하였다. 실제로 핵군축은 양 연구의 공동 주제였으며, 『핵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저널은 이 같은 주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케네스 볼딩은 경제학자이면서 최초의 평화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1949년부터 1967년까지 미시간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갈등해결연구소(Center for Research on Conflict Resolution)를 설립하였고 『갈등해결저널』(*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을 1957년에 창간하였다. 볼딩은 또한 국제평화학회(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재단의 창립에도 기여하였다.

볼딩은 1946년 자신의 저서 『평화경제학』(*The Economics of Peace*)에

²⁹⁾ Barry Buzan and Lene Hanse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05-106.

서 두 차례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의 재건과정을 설명하면서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³⁰⁾ 그는 전쟁의 폐해는 어떤 의미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전쟁이 갈등의 하나로서 전쟁이 없어도 다른 형태의 갈등은 존재하며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가 “평화적인 갈등”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법정 투쟁, 투표, 선거 캠페인 등에서 보는 것처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³¹⁾

볼딩은 여기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로 다른 집단들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되어 접근하면 해결책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인이 일본인이나 독일인을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일본인과 독일인이 미국인을 ‘우리’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전쟁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갈등 자체보다는 인류적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전쟁을 초래하며, 경제적 이해의 차이는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사소한 부분일 뿐이라고 말한다.

칼 도이치는 볼딩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공동체 개념에서 찾으려 했다. 도이치는 1957년 공동저작 『정치공동체와 북대서양지역』(*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에서 안보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볼딩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였다.³²⁾ 도이치의 논의는 영원한 평화를 구한다는 거대한 명제보다는 하나의 작은 질문, 즉 어떻게 북대서양 안에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가로 시작한다. 그

30) Kenneth E. Boulding, *The Economics of Peace* (London: Michael Joseph Ltd., 1946).

31) 이런 주장은 이후의 저작 Kenneth E. Boulding, *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에서도 드러난다.

32) Karl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Perspectiv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가 말하는 안보공동체는 “통합”되어가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그 형성과정에서 강력한 공동체 감각 또는 의식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또 안보공동체에서는 공동의 문제들을 반드시 평화적 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물리적 힘이 아닌 제도화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이론을 고전적 통합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안보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 도이치는 사이버네틱스 모델을 도입한다. 안보공동체가 엘리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관여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의 흐름과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된다. 도이치의 사이버네틱스 모델은 그의 동료이자 친구인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위너는 모든 생명체는 조직을 약화시키고 의미있는 것을 파괴하려는 현상과 투쟁하는 것이라고 보고,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메시지와 의사소통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다.³³⁾

도이치는 1966년의 『정부의 신경』(*Nerves of Government*)이라는 책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정보, 내부의 기억 정보, 의사소통에 의한 정보 교류를 강조하고,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억압이나 비밀에 의해 막혀있으면 사회는 의식없이 되풀이만 하는 걸어 다니는 시체와 같이 될 것이다”고 말한다.³⁴⁾ 도이치는 분명히 민주주의 신봉자로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에 바탕한 의사결정이 정치에 생명력을 준다고 본다. 또 국제정치에서도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한 제어와 조정능력이 무력갈등

33) Hayward R. Alker, “The Powers and Pathologies of Networks: Insights from the Political Cybernetics of Karl W. Deutsch and Norbert Wiene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7, no. 2 (2011), pp. 354-378.

34) Karl Deutsch, *The Nerves of Government: Models of Communication and Control* (New York: Free Press, 1966), pp. 120-124, 129.

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안보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에게 있어서 정보와 의사소통 자체가 제도인 것이다.

도이치가 국내적 및 국제적 의사결정에서 정보와 의사소통의 순기능 측면을 설명하였다면, 그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디터 쟁하스는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의 단절 현상, 즉 병리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오늘날 쟁하스는 “문명화 육각모델”(폭력독점, 법치국가, 민주적 정치참여, 상호의존과 흥분통제, 사회정의, 갈등해결문화)을 제시한 학자로 더 알려져 있지만, 냉전기 그는 사이버네틱스를 활용한 억제이론을 개발하고 조직화된 비평화상태(organized peacelessness)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³⁵⁾

쟁하스가 말하는 조직화된 비평화상태는 두 개의 강대국, 즉 미국과 소련이 군비경쟁에 빠지는 비정상 현상이며 하나의 “자폐적 적대” 상황이다. 쟁하스가 제기한 질문은 왜 그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이다. 먼저 그는 억제정책을 펴는 두 강대국 간에 실질적 교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중요한 것으로 억제정책에서 내향적인 과정이 외향적인 과정보다 지배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엘리트 안에서 이해되는 적대성 그리고 엘리트가 대중에게 호소하는 적대성이 실제 적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적대성의 정도보다 훨씬 높으며, 이 같은 현상이 재생산됨으로써 자폐적 적대는 강화된다고 본다. 적대성이 엘리트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대중의 여론형성 과정에서 내면화됨에 따라 적의 위협은 존속할 뿐만 아니라 적은 점점 더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사이버네틱스

35) 이와 관련한 쟁하스의 주요 저작은 *Abschreckung und Frieden: Studien zur Kritik organisierter Friedlosigkeit* [*Deterrence and Peace: Studies in the Criticism of Organized Peacelessness*] (1969)이며, 이 글에서는 Dieter Senghaas, *Dieter Senghaas: Pioneer of Peace and Development Research* (Heidelberg: Springer, 2013), Kindle Edition을 참조함.

와 체계론에서 말하는 적극적 환류(positive feedback)의 과정으로, 내부에서 리사이클되는 정보가 자기교정 보다는 제어불능 상태를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자폐적 적대는 매우 부정적인 억제정책을 낳는다. 억제는 원래 외향적이고 상호적이어서 일종의 암묵적인 협상과 같은 것이어야 하지만, 스스로 내부 보호막을 쳐서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병리적, 자폐적 적대는 본질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자폐적 적대의 강화로 상대방과의 실질적 의사소통의 기회가 감소하며 그 결과 군비경쟁이라는 퇴행에 이르게 된다.³⁶⁾

쟁하스의 조직화된 비평화상태는 평화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불당이나 도이치와 같은 평화학의 선각자들은 평화를 전쟁의 대척개념으로 이해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체 의식이나 안보공동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설명에는 평화 과정에 온존해 있는 스포일러, 즉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행위자이든 제도이든 현상이든—가 적극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쟁하스는 적폐적 적대라는 저해 요소가 발생하는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평화의 촉진과 저해의 두 측면을 모두 분석하는 것이 평화학의 임무임을 일깨워 주었다.

조직화된 비평화상태를 예방하고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흐름과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핵전쟁의 위협이 팽배했던 시기, 조지프 로트블랫(Joseph Rotblat)을 비롯한 의식 있는 과학자들의 주도로 1957년부터 개최된 퍼그워시회의(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가 동서진영 간 반핵 인식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³⁷⁾ 퍼그워시에서의 회의와 소통은

³⁶⁾ Dieter Senghaas, "Towards an Analysis of Threat Poli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iginally published in 1974) in Dieter Senghaas, *Dieter Senghaas: Pioneer of Peace and Development Research* (Heidelberg: Springer, 2013), Kindle loc. 1003-1114.

서방과 소련의 인사들이 핵전쟁과 군비경쟁의 위험성 인식을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국의 당국자들이 핵군축이 생존의 길임을 깨닫도록 하였다. 그 결과 미소 양국은 반(反)탄도미사일협정(Anti-Ballistic Missile Treaty), 전략무기제한협정(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등 핵군축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불당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도이치의 안보공동체, 그리고 쟁하스가 추구했던 평화상태의 부분적 실현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냉전기 말, 칸트의 공화정론을 이어받아 민주국가들 사이 무력 충돌 부재를 설명하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마이클 도일(Michael W. Doyle)이 칸트와 여타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인용하며 최초로 이런 논지를 제시하였다.³⁸⁾ 칸트 공화정론의 현대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이론은 냉전 종식 후에는 민주평화론이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민주평화론을 평화연구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과연 누가 민주국가 내의 의견을 대표하는가 문제이다.³⁹⁾ 잭 스나이더(Jack Snyder)와 에텔 솔링겐(Etel Solingen)의 설명처럼, 국내 세력들의 정치적 지향과 이들 사이의 결탁 또는 제휴 양상이 국제적 협력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⁰⁾ 둘째는 민주국가가 비민주국가 내의 비인도적 상황에 개입할 때

37) 김성철, 「냉전기 핵통제 인식공동체의 형성」 『평화학연구』 14권 1호 (2013), 29~52쪽.

38) Michael 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1,”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2, no. 3 (1983), pp. 205-235;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2,”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2, no. 4 (1983), pp. 323-353 참조.

39) Andrew Moravcsik, “The New Liberalism,” in Christian Reus-Smit and Duncan Snidal, eds.,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234-254.

40) Jack Snyder, *Myths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 (Ithaca: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11년 리비아 내전 시 서방측의 개입이 카다피 정권의 살상행위 저지를 넘어서서 주권 침해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비민주적 체제가 시민에 대해 책임성을 지닌 민주체제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비폭력적인 체제전환의 조건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냉전기 통합·공동체론을 주창한 선각자들은 동서갈등 속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칸트가 생각했던 연방과 같은 일종의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사이버네틱스와 체계론은 이들이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과학적 모델이었다. 그리고 자유주의 전통에서 제기된 민주평화론은 칸트의 공화정론을 이어받은 창의적 이론으로서, 민주화의 조건에 관한 다변화된 연구와 민주국가 내 세력의 대표성에 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2. 적극적 평화론

통합·공동체론이 전쟁방지를 목표로 한 국가중심 접근이었던 반면에, 적극적 평화론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부정하는 인간중심 접근이다.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는 용어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에 의해 창안되어 그의 독자적 브랜드가 되었다. 불딩과 도이치가 평화·갈등 연구를 과학화한 선각자임에도 불구하고, 갈통이 평화학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이유는 평화의 대척개념으로 폭력을 위치시키고 평화 및 폭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갈통은 전쟁만이 폭력이 아니라 빈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Etel Solingen, *Regional Orders at Century's Dawn: Domestic Influences on Grand Strate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을 참조.

곤, 차별, 압박 등을 또 다른 폭력이라고 간주한다.

1930년 오슬로 태생인 갈통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의사이고 어머니가 간호사인 의료인 집안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다. 그런 까닭에 후일 그는 평화와 폭력의 관계를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면서, 마치 의사가 병의 근원을 도려내듯이 폭력을 적출해야 하는 것으로 믿었다.⁴¹⁾

갈통이 평화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48년 간디의 죽음이었다. 당시 17살이었던 갈통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는데, 간디의 비폭력 사상에 대해 깊게 감명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갈통이 1951년 노르웨이에서 징집명령을 받았지만 양심거부자가 되어 대체복무를 한 것도 간디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만 하더라도 노르웨이에 반전 주장과 전쟁연구는 있었지만 평화에 대한 주창과 평화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갈통은 평화에 관한 전문가이자 실천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⁴²⁾ 그의 훌륭한 언변은 두 가지의 역할을 행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 점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갈통은 오슬로대학에서 수학박사와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59년 오슬로평화연구소(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PRIO)를 세우고 소장이 되었으며, 1964년에는 『평화연구저널』(*Journal of Peace Research*)을 창간하고 국제평화학회의 창립에 참여하였다. 그는 열정적 성격과 독창적 이론으로 평화학의 정립에 기여한 반면, 특유의 리더십 스타일로 연구소 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간디의 비폭력 사상을 강력하게

⁴¹⁾ Stein Tønnesson, "PRIO and Peace Research from Cold War to Decline of War,"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강연, 2012.10.25.

⁴²⁾ PRIO, "Inspiration from a Father: Johan Galtung Interviewed by Henrik Urdal," posted May 15, 2019. <https://blogs.prio.org/2019/05/inspiration-from-a-father-johan-galtung-interviewed-by-henrik-urdal/>; 서보혁, 「요한 갈통의 평화인권론」 『통일과평화』 4권 2호(2012), 185~196쪽.

주장한 것이 하나의 예이다. 그는 1969년 평화연구소장을 그만두지만 1977년까지 오슬로대학에서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오슬로를 평화연구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이후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학의 확산과 평화 실현에 힘을 기울였다. 갈통이 오슬로를 떠난 것은 국경을 초월한 코스모폴리탄이 되려는 의도에서였는 바, 1993년 트랜센드 인터내셔널(TRANSCEND International: A Peace Development Environment Network)라는 조직을 창설해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였다.

갈통의 주장에서 주목할 것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구분이다. 소극적 평화가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반면,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적극적 평화는 폭력의 유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즉 사회정의가 실현된 상태이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쟁과 평화”라는 표현에서는 전쟁이 평화와 대척개념이므로 전쟁이 없으면 평화이다. 하지만, 갈통은 평화를 전쟁의 부재보다 더 넓은 의미로 파악한다.

이런 맥락에서 갈통은 1969년 발표한 논문에서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⁴³⁾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은 아니지만 구조화 또는 제도화된 억압과 불평등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구조적 폭력은 빈곤, 결핍, 박탈, 건강문제, 조기사망, 억압 등과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부정의(social injustice)이다. 갈통은 구조적 폭력을 개별적 폭력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설명하기도 한다. 개별적 폭력이 파도에 비유되는 반면 구조적 폭력은 바다와 같다. 개별적 폭력은 그 해악이 가시적인 반면, 구조적 폭력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구조적 폭력은 거

43)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1969), pp. 167-191.

대한 잘못된 질서이므로 결국 파국적인 해약을 초래한다.

갈통은 구조적 폭력과 동일 선상에서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을 설명한다.⁴⁴⁾ 문화적 폭력은 종교,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 과학 등에서의 상징 영역이 직접적 폭력 또는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그렇게 느끼게 하며, 또는 최소한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느끼게 만든다. 문화적 폭력은 지속적이며 내면화된다는 해약을 지니고 있다.

갈통에 의하면, 폭력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의 트라이앵글 어디에서도 발생하며 다른 유형의 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 폭력구조가 제도화되고 폭력문화가 내면화되면, 직접적 폭력은 반복적이며 의례적인 것이 된다. 반대로, 폭력의 트라이앵글이 평화의 트라이앵글로 바뀌려면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평화문화가 정착하여야 한다.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의 개념은 전쟁 중심의 갈등 연구에 비판적, 대안적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또 이들 개념은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에게 영감과 통찰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적극적 평화라는 용어는 평화와 폭력에 관한 거대담론을 이끌어내기도 하였고, 이제는 단순히 전쟁 부재가 아닌 폭력 유발 요소가 해제된 상태를 뜻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갈통의 주장은 논쟁적인 것이 사실이다. 갈통에 대해 가장 친절한 비판자는 평화학의 선각자인 케네스 볼딩이었다. 볼딩은 1977년 논문에서 갈통의 가치지향이 감정적이어서 사회적 현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도록 만들고 이로써 평화학을 규범과학으

⁴⁴⁾ Johan Galtung,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7, no. 3 (1990), pp. 291-305.

로 성장시키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볼딩은 갈통의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의 구분이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비판하는 바, 두 가지 평화가 상반되지 않으며 가치 측면에서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볼딩은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와 유사한 분배적 평등을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희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볼딩은 빈부의 차가 불평등한 경제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상이한 사회적 및 문화적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빈곤 문제를 지식, 노하우, 조직화에 의한 생산의 확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⁵⁾ 요약하자면, 볼딩은 갈통의 적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이 은유적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모델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볼딩은 평화학이 규범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의 악화를 어떻게 방지하고 갈등을 평화로 반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볼딩의 비판이 있는 지 십년이 지나서 갈통은 볼딩이 착취와 압박의 구조적 폭력을 무시함으로써 세계의 반쪽만을 보며 불안정한 평화만을 추구한다는 반박 논문을 출판한 바 있다.⁴⁶⁾

적극적 평화론은 평화 개념을 확장시키는 데 공헌한 것이 사실이며 동시에 동서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현실로 구현되는 데 한계를 지녔던 것도 사실이다. 전쟁 특히 핵전쟁 방지는 아직 평화학의 주요 아젠다였으며, 갈통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임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적극적 평화론은 좌파적 이론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아무튼 그의 이론은 평화학에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 데 공헌했음에 틀림없다. 더

⁴⁵⁾ Kenneth E. Boulding, "Twelve Friendly Quarrels with Johan Galtung,"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14, no. 1 (1977), pp. 75-86.

⁴⁶⁾ Johan Galtung, "Only One Quarrel with Kenneth Boulding,"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4, no. 2 (1987), pp. 199-203.

중요한 것은 냉전이 종식되고 국가 간 전쟁보다는 저발전, 인종갈등, 외국인 혐오, 문명충돌이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의 적극적 평화론이 인간개발론 또는 인간안보론으로 재현되었다는 점이다.

3. 사회변혁론

냉전기 비판적 평화학의 전개에 있어서 서구 지식인들의 마르크스주의의 재해석이 공헌한 바를 빼놓을 수 없다. 1960년대 말부터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은 인권운동, 학생운동, 반전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좌파평론』(*New Left Review*) 저널을 통해 새로운 사회변혁론을 추구하였다. 신좌파라고 불리우는 이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했던 랄프 밀리반드(Ralf Miliband) 중심의 분파는 사회변혁의 투쟁에서 노동계급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와 대조되게, “포스트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던 에네스토 라클로(Ernesto Laclau)와 샹탈 무프(Chantal Mouffe) 등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환원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에 의한 급진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여 서구에서의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계급적 문제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반핵, 반전, 환경, 인종평등, 인권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다.

신좌파내 분파들 사이에서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입장차 만큼이나 사회변혁에 대한 접근에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밀리반드는 페미니즘이 왜 반드시 사회주의적, 계급투쟁적이어야 하는가를 정당화한다. 그에 의하면,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평등의 가치에 근거해 노동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성불평등의 근원을 전통과 편견에서 찾음으로써 문제의 궁극적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는 성불평등 문제가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의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하더라도, 생산관계에서 착취가 계속되는 한 성불평등은 구조화된

채 남아있게 된다고 본다. 또 밀리반드는 성차별의 정도가 계급적 지위에 따라 다른바, 노동계급의 여성이 남성 고용인으로부터 받는 불평등의 정도가 부르조아 여성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본다. 따라서 계급적 관계의 해소만이 성불평등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간주한다.⁴⁷⁾

라클로와 무프는 마르크스주의의 한계와 역사성을 인정하여야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가치가 더욱 드러난다고 이해한다. 이들은 산업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관계가 복잡화되어 사회적 갈등구조가 변화되었다고 본다. 그 갈등구조가 다원성(plurality)을 띠게 되고, 사회변혁의 주체와 대상도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즉, 생산관계에 의한 적대는 여러 가지 갈등관계의 하나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을 보자.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가장 큰 장점은 자본주의의 자기발전의 근본적 경향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적대를 규명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그 분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적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마르크스의 분석이] 주로 19세기 유럽의 경험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탈구효과는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정도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주체와 이들의 투쟁의 다원성에 기초하고 있다. 갈등의 현장은 확장되어 있으며, 사회변화의 특권적 주체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⁴⁸⁾

라클로와 무프는 『헤게모니와 사회주의전략』(*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에서 사회 갈등의 의미를 헤게모니에 의한 종속적 질서가 아닌 개방되고 투명한 동등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갈등이나 적대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면서 사회변혁의 기초가 됨을

47) Ralf Miliband, *Divided Societies: Class Struggle in Contemporary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100-103.

48) Ernesto Laclau and Chantal Mouffe, "Post-Marxism without Apologies," *New Left Review* 1/166 (Nov/Dec 1987), p. 106.

지적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종속 및 불평등에 대한 도전이라는 집단적 행동으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담론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보면서, 그 조건을 급진적 민주주의란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이들이 말하는 급진적 민주주의는 차이(difference)의 논리를 인정하는 체제이다. 라클로와 무프는 자유민주주의와 속의민주주의는 합의(consensus)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종, 의견, 계급, 성, 세계관 등에 관한 차이를 억압한다고 보고, 세상에는 합의에 저항하는 여러 가지 차이와 반대의견이 존재하는데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로 급진적 민주주의에서 “차이의 논리는 정치공간의 확장 그리고 복잡성의 증대의 논리이다”라고 말한다.⁴⁹⁾ 또 급진적 민주주의에는 특권을 지닌 주체도 없으며 평등을 추구하는 주체들로 인해 종속적 질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클로와 무프가 차이의 확장에 의해 드러나는 억압적 권력관계들을 교정해야 한다고 본 점은 계급투쟁에 초점을 맞춘 밀리반드식의 사회주의적 변혁론과 확실히 맥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신좌파 이론가들은 자신의 연구를 평화학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평화학의 비판적, 논쟁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좌파내 분파들은 갈등, 적대, 투쟁 등의 용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서도 혁명이 수반하는 폭력을 배제하였으며 그렇다고 보편적 인도주의를 지고의 가치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었다. 신좌파의 사회변혁론은 성이나 인종과 같은 귀속적 정체성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다양한 이슈 중심의 사회운동을 정당화하였다. 특히 라클로와 무프는 사회변혁의 주체를 계급 이외의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회 집단으로 확장시켰다. 이들은 자

⁴⁹⁾ Ernesto Laclau and Chantal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 1985), p. 130.

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드러난 갈등의 다양성을 다루면서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면 자본주의 내 변화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 이에 대해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잉글하트는 마르크스주의 재해석보다는 전후 선진 서구사회에서의 가치 변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는 1977년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에서 전후 세대 간 질적 차이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차이의 내용을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라고 부른다.⁵⁰⁾ 경제적 부를 누리고 성장한 서구의 전후세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정보획득력이 뛰어나며, 가치추구에 있어서 물질지향적이었던 기성세대와 다르다. 탈물질주의 세대는 소속의식 그리고 자기실현을 중요하게 여긴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런 질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므로, 이 세대는 이슈 중심의 신사회운동을 통해 자기실현을 추구한다.

전후 자본주의의 변화에서 비롯된 신사회운동은 1980년 서독 녹색당의 출현으로 정치세력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녹색당은 1968년 학생운동에서 촉발되고 확산된 환경운동, 반전운동, 반핵운동, 인권운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창당 이후에는 오염, 핵미사일 배치, 나토의 군사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과 캠페인을 동시에 펼쳐나갔다.⁵¹⁾ 그리고 녹색당은 1983년 연방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서독의 정치질서에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의 신사회운동은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노동운동을 포함하면서

50) Ronald Inglehart,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p. 21-71.

51) Russell J. Dalton, "The West German Party System between Two Ages," in Russell J. Dalton, Scott C. Flanagan, and Paul Allen Beck, eds.,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Realignment or Dealig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104-133.

도 생태·환경운동, 반핵운동, 성평등운동, 소비자운동 등으로 전개되면서 기존 학생중심의 민주화운동에서 볼 수 없었던 온건한 시민운동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재해석 전통은 후일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평화 및 갈등에 관한 비판적 분석을 자극하였는 바, 특히 기존의 전통적, 서구적 접근방식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을 낳게 하였다. “비판적 평화학”이라 불리는 이 같은 흐름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풍미하게 되었는데 주로 갈등 후 평화구축과 관련 자유주의적 분석에 대해 비판한다. 비판적 평화학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든 안 하든, 휴전, 무장해제, 선거, 권력공유 등 서구적 제도화를 평화구축의 성공요인으로 일반화하려는 입장에 비판적이며, 대신 역사적 특수성과 지역적 차이를 강조한다.⁵²⁾

또 마르크스주의의 재해석의 전통은 오늘날 “레드와 그린의 만남”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생태사회주의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 신좌파 이론과 신사회운동이 생태 및 환경을 새로운 갈등구조 속에서 파악했다면, 오늘날의 생태사회주의자들은 원래 마르크스의 사상 안에 생태주의가 내재해 있었다고 본 것이다.

52) 예컨대, David Roberts, ed., *Liberal Peacebuilding and the Locus of Legitimacy* (London: Routledge, 2015); Julian Graef, *Practicing Post-Liberal Peacebuilding: Legal Empowerment and Emerging Hybridity in Liberia*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5); Sorpong Peou, “The Limits of Potential of Liberal Peacebuilding for Human Security,”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vol. 2, no. 1 (2014), pp. 37-60.

IV. 냉전 후 복합적 평화학의 전개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함께 반 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냉전은 종식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환희는 일시적이었고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오래 가지 못했으며, 세계화로 인해 상호의 존성은 높아졌지만 국가 간 그리고 사회집단 간 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다.

냉전 종식 후 평화·갈등에 관한 새로운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 첫째, 국가 간 전쟁은 거의 사라졌지만 국가는 여전히 위협 주체로 남게 되었다. 인류 생존에 대한 핵위협은 냉전기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핵무기 확산(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의 핵개발, 그리고 암시장연계), 극초음속 미사일개발, 중거리핵전략협정(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파기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이버전이 국가 간 위협요소가 되고 개인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었으며, 전통방식에서 벗어난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각 국가는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주권에 더하여 사이버 주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또한 리비아 내전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조직적인 인권유린 및 대량살상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문제들은 새로운 방식의 국제적 및 국가 간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국가 내 갈등과 살상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르완다, 구유고,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내전은 국가주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종차별, 문명갈등, 테러리즘이 새로운 폭력의 요소가 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족주의도 평화적 공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는 바,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의 외국인 혐오와 시리아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유럽 국가들의 포퓰리즘

정치가 그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간안보 및 인도주의가 평화학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기후변화와 기술발전의 파급효과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한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자연재해는 단순히 홍수, 가뭄에 그치지 않고 소외된 집단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의학, 정보통신, 사이버, 인공지능의 발전은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낳는 바, 유발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한 동시에 탈지능, 탈도덕, 탈감성이라는 비인간화의 길을 걷고 있다.⁵³⁾

냉전종식 후 이상과 같은 변화들은 인류에게 도전인 동시에 평화학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중심 접근, 인간중심 접근, 구조비판 접근의 평화학은 각각 안보공동체론, 인간안보론, 생태사회주의로 거듭 태어났다. 아울러 주목할 것은 평화학이 세 가지 접근이 결합하고 융합하여 복합성을 띠는 단계, 즉 복합적 평화학의 단계로 진입하였다는 점이다. 복합적 평화학에서는 연구 주제가 세 가지 중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긴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보호책임론과 평화구축론은 국가중심과 인간중심의 결합이며, 기후변화 논의는 세 가지 접근을 망라한다. 그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이론과 주장들은 국가, 인간, 구조라는 기존 틀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된다.

복합성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주체”로서 UN의 역할이 확장된 점을 들 수 있다. UN은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활동과 인도적 개입의 임무를 주도, 조정하고 있다. UN은 참여국과 기구들의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고 스폰서십을 관리한다.⁵⁴⁾ 또한 기후변화협약, 비확산검토회의 등에서 UN

53) Yuval Noah Harari,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London: Harvill Secker, 2015), pp. 43-58.

54) 김태균, 「한반도 전략적 평화를 위한 시론」 김태균 외, 『한반도 평화학: 보편성

은 협의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주체들, 즉 국가, 비정부기구 등의 의견이 경쟁하는 장이 된다. UN은 주체로서 그리고 공론의 장으로서 지구적 차원의 갈등 및 평화 문제를 다루는 데서 기존의 세 접근의 벽을 허물고 있으며 UN 사무총장의 리더십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

복합성의 또 다른 요인으로 평화학의 “대상”이 다양화되어 기존의 세 가지 접근 중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UN이 중심이 된 보호책임 논의는 평화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는데, 기존의 국가주권 개념에 인간안보와 인도주의 관점이 새롭게 접합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 UN, 국가, 비정부기구 등이 관여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 비핵지대(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몽골의 비핵지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triple nexus) 등 다양한 안보 및 개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자들의 이론적 논의와 정책 대안은 국가중심 접근, 인간중심 접근, 구조비판 접근이 서로 긴장하면서도 융합하는 과정 중에 있다.

1. 안보공동체론

냉전 종식 후 국제정치 분야의 이론 중에서 가장 평화·갈등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안보공동체론을 들 수 있으며, 이 안보공동체론은 구성주의 시각에 의해 크게 영향받았다. 다시 말해, 안보공동체론은 냉전기 통합·공동체론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구성주의에 의해 이론적 정교함이 더해졌다.

구성주의는 1980년 말 현실주의 이론적 가정을 비판하면서 등장해 안

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65~304쪽.

보,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지구적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구성주의는 1990년대 이래 이론적으로 정착하고 경험적 분석을 축적하였으며, 1999년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의 저서 『국제정치의 사회이론』(*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의 출판을 정점으로 비판적 점검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기존 현실주의는 국가간 관계를 무정부상태로 보고 이 상태가 영속하면서 국가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신 구성주의는 국제정치가 국가와 구조의 상호작용 그리고 국가 간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⁵⁵⁾

평화학의 발전과정에서 구성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국가 간 협력이 생성되는 데 있어서 특히 정체성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체성의 변화가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웬트에 의하면, 한 국가의 정체성은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진행되는 동시적 과정에 의해 형성되며, 국가 간의 정체성도 상호과정에 의해 구성된다. 또 국가의 정체성과 이에 상응하는 이익도 영속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각 국가는 정해진 이익을 획득하는 데 전념한다기 보다는, “자”와 “타”의 관계 속에서 원하는 이익을 구성해 나간다. 즉, 정체성과 이익은 중요한 “타”에 의해 어떻게 취급되는가에 대한 대응에서 학습되고 강화된다. 이런 미러링 과정에서 “자”는 “타”를 별개의 존재로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연루된 적극적인, 현재진행형인 구성요소로 파악한다. 국가 간의 집단적 정체성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운명체 인식과 같은 것으로, 쌍방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또는 제3자의 매개에 의해 구성되기도 한다. 집단적 정체성의 변화는 옛

55) 신유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2권 2호(1998), 147~168쪽;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50권 2호(2010), 35~64쪽.

정체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이 구조적 변화로서, 일종의 문화적 변화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의 적을 경쟁자 또는 친구로 보게 되는 과정이 언어, 태도, 인식의 동질화과정 또는 수용과정과 같기 때문이다. 웬트는 이 문화적 변화가 쉽지는 않으나 가능하다고 역설한다.⁵⁶⁾

임마누엘 아들러(Immanuel Adler)와 마이클 바넷(Michael Barnett)은 구성주의 관점에서 안보공동체의 형성, 특히 집단 정체성의 생성과정에 대해 논하고 안보공동체가 안정된 평화(stable peace)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안보공동체 연구가 현실주의 대 이상주의의 이분법을 벗어나, 진보적 이상주의와 최악 회피적인 현실주의를 절충하는 것으로 본다. 안보공동체론은 칼 도이치의 공동체 감각과 의사소통 개념을 더 진전시켜, 국가 간 사회적 학습과 신뢰를 통한 가치공유에 바탕한 안보공동체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⁵⁷⁾ 이들이 말하는 안보공동체는 전략적 연대나 공식 동맹이 아니면서도, 분쟁해결에서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규범을 포함한다. 이 규범은 강대국의 힘으로 세워지는 대신에, 약소국들에게 안보와 여타 혜택에 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권위적 주체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

아들러와 바넷은 공동체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

56)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313-369.

57) Immanuel Adler and Micheal Barnett, eds.,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가 안보공동체론을 제시한 대표저작이며, 이후 이 이론은 지역 단위의 안보와 평화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Michael C. Williams and Iver B. Neumann, "From Alliance to Security Community: NATO, Russia, and the Power of Identit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9, no. 2 (2000), pp. 357-387; Amitav Acharya,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EAN and the Problem of Regional Order* (London: Routledge, 2009) 등.

은 특히 상호작용, 사회화와 사회적 학습, 신뢰, 초국가적 정체성의 개념을 발전시킨다. 상호작용은 상징적, 경제적, 물질적, 정치적, 기술적인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상호작용이 양적, 질적으로 증진됨에 따라 집단적인 경험이 발생하고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들의 주장 중 국제기구가 사회화와 사회적 학습에 기여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점은 도이치가 주목하지 않았던 대목인데, 아들러와 바넷에 의하면 국제기구는 평화적 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여기서 각 국가가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사회적 학습을 통해 공유된 정체성을 생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기서 사회적 학습은 적응 또는 단순 학습이 아니라, 행위 주체가 현실을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고양하는 과정이다.

안보공동체론이 사회적 학습을 상호신뢰와 연관시키는 것은 독특하다. 신뢰는 내가 통제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으로서 여기에는 강제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배반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⁵⁸⁾ 그런데 아들러와 바넷에 의하면, 사회적 학습과정은 상호관계에 관한 공통된 정의—안보가 무엇인가 또는 합당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개발하도록 도와 각 주체가 국제기구에 의존하지 않고도 서로 신뢰하게 만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집단적 초국가적 정체성이 생성된다.⁵⁹⁾

그런데 안보공동체론을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 형성 과정을 훼손하는 스포일러—행위주체인 제도이든 현상이든 가치이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냉전기에 디

58) 신뢰의 리스크에 관하여 김성철, 「신뢰」, 김성철이찬수 편,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117~144쪽 참조.

59) Immanuel Adler and Micheal Barnett,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Security Communities," in Adler and Barnett, eds., *Security Communities*, pp. 29-65.

터 쟁하스가 그의 억제이론에서 적대의식이 내부의 환류과정에서 증폭되는 것을 보여준데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간 신뢰 구축이나 정체성 형성에서 방해 요소를 해소하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집단기억에 의해 불신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나 가치의 차이가 스포일러로서 국가 간 화해와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안보공동체론의 일반화의 한계를 의식한 듯 아들러와 바넷은 자신들의 이론이 사회구성주의적이면서 경로의존적이라고 대응한다. 사회구성주의적이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화와 사회적 학습에 의해 국제정치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의미인 한편, 경로의존적이라는 말은 국제정치가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서 초기 현상이 미미한 것이든 또는 무작위적인 것이든 이후의 과정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후자는 특히 복잡체계론에서 설명하는 초기조건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과 같은 것으로, 초기의 작은 차이가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간안보론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가안보 개념에 대비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개도국에서의 내부 불안정이 그 차제로 끝나지 않고 외부의 개입을 불러오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권국가 단위의 안보 개념이 다소 모호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개도국의 정치체제가 워낙 비민주적이어서 최고지도자의 권력독점과 지속을 뜻하는 체제안보(regime security)와 국가 주권과 독립성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사이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자원부족, 환경파괴, 과잉인구, 저발전 등의 비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⁶⁰⁾

이런 가운데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표하면서 인간안보 개념을 처음으로 공식화하였다.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와는 대조적으로 각 개인의 안보를 우선시 한다. 이 점에서 『인간개발보고서』는 인간안보가 사람중심적(people-centered) 안보라고 명시하고 있다.⁶¹⁾ 이 보고서 발표 이후, 인간안보는 경험 분석의 축적과 이론 논의의 심화에 힘입어 평화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되었다. 인간안보의 실현은 톨스토이가 말하는 사람중심의 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요한 갈통의 말과 같이 구조적 폭력을 없애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안보의 개념적 연원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이다. 포괄적 안보는 냉전기에 일본이 에너지, 식량 등 안보자원의 수급과 관련해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아시아적 전통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포괄적 안보는 냉전 종식 후 협력적 안보라는 개념으로 진화하였는데, 이는 비군사적, 비전통적 위기를 광범위한 안보 아젠다 속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를 지녔다. 다시 말해, 인간안보 개념은 포괄적 안보와 협력적 안보를 배경으로 탄생하였다.⁶²⁾

인간안보는 사람을 위한 안보로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욕구로부터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⁶³⁾ 두 가지의 인간안보는 상이하기도 하고 보완적이기도 하다. 전자는 “개발에 바탕한”(development-based) 인간안보인 반면, 후자는 “보호에 바탕한”(protection-based) 인간안보라고 말할 수 있다.⁶⁴⁾ 따라서 전자는 사

60) Amitav Acharya, *Constructing Global Order: Agency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Kindle loc. 4223-4255.

61)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62) Acharya, *Constructing Global Order*, Kindle loc. 4287.

63)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p. 24.

회·경제적 지원 또는 인간개발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의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취약한 시민들을 무장갈등과 대량살상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같은 상황에 외부로부터 개입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개발에 바탕한” 인간안보는 파키스탄 출신 경제학자 마후브 울 하크(Mahhub ul Haq)의 인간개발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하크는 라호르대학교와 캠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캠브리지대에서는 인도 출신 경제학자인 아르마티아 센(Armatya Sen, 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과 만모한 싱(Manmohan Singh, 2004-2014년 인도 총리)와 동시대인이었다. 하크는 1989년 UNDP의 특별고문역을 맡아 국제적 학자들로 팀을 구성하여 1990년 이래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센은 패널 고문으로 참여하여 하크와 함께 인간개발지표(Human Development Index)를 개발하는 주역이 되었다. 따라서 하크와 센이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 개념을 공식화할 때 인간개발에 중점을 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인간개발은 빈곤, 문맹, 질병, 차별, 정치적 자유 제한, 폭력갈등 등 저발전 국가에서 나타나는 위협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캐나다 외교장관인 로이드 액워시(Lloyd Axworthy)는 인간개발 중심의 인간안보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인간개발보고서』가 저발전에만 관심을 보이고 폭력 갈등으로 인한 인간안보 침해를 묵과한 것으로 보았다. 1997년 이래 액워시는 노르웨이 외교장관 크누트 볼르백(Knut Vollebaek)과 함께 “보호에 바탕한” 인간안보라는 협소한 의미의 인간안보를 강조하였다. 이 두 외교장관의 협력은 캐나다와 노르웨이

64) Neil S. MacFarland and Yuen Foong Khong, *Human Security and the UN: A Critical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라는 서방 중견국가 사이의 인간안보 공조를 상징하면서, UNDP 주도의 “개발에 바탕한” 아시아적 인간안보 개념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서구적 인간안보와 아시아적 인간안보 사이의 대비이다.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1997년 오타와 선언에서 대인지뢰 반대를 결의하고, 1998년에는 노르웨이 베르겐 앞 리쇼엔 섬에서 리쇼엔 선언(Lysøen Declaration)을 발표하고, 이듬해에 다시 베르겐에서 인간안보네트워드를 출범해 13개 국가대표와 함께 UN난민고등판무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대표도 참가하였다. 리쇼엔 선언과 인간안보네트워드는 중견국가 및 약소국, 다양한 국제기구에 의한 개입과 압력으로 중요한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예를 들어, 2003년 로마규정에 의거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 2005년 세계정상회의 및 UN총회에서 보호책임 채택, 그리고 무장갈등에서 아동 및 여성의 보호에 관한 UN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형사법 제도화에 기여하였다.⁶⁵⁾

인간안보의 두 가지 요소, 즉 “개발에 바탕한” 인간안보와 “보호에 바탕한” 인간안보는 서로 융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이다.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인간안보의 분석 및 실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주로 저발전 사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이 그렇다.

기존 국가안보에 대비되는 규범으로 등장한 인간안보가 많은 평화연구자들을 매료해온 것이 사실이다. 개발과 평화구축에 관한 주제들이 거의 모두 인간안보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⁶⁶⁾ 반면, 인간안보는 문

65) Lloyd Axworthy, Knut Vollebaek, Stein Kuhnle, and Sorpong Peou, “Introduction: Human Security at 20—Lysøen Revisited,”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vol. 2, no. 2 (2014), pp. 143-149.

66) Sorpong Peou, “Is there a Future for Human Security Studies?” presented at 7th Peace Research Seminar entitled Human Security Today and Its Future Research Agenda,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3.5.23.

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성향을 가진 개념으로 그 자체로 이론이라고 부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인간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제기구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⁶⁷⁾ 인간개발 목적의 인도적 지원에서 공여국 정부의 의지와 역할은 아직도 막강하며,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는 UN안보리,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기구의 역할과 함께 관련 국가 정부들의 관여가 불가피하다.

3. 생태사회주의

냉전 종식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의 쇠퇴를 수반하였고 의 사회주의 세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태와 관련 재해석을 모색하게 된다. 냉전 절정기 신좌파가 계급중심적 설명에서 벗어나 생태, 환경, 반핵, 인권 등 분야의 사회변혁론을 제기하였던 흐름의 연장선 상에서, 냉전 말기부터 시작해 냉전 종식과 더불어 “적색과 녹색의 결합,” 즉 마르크스주의와 생태주의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기존 신좌파에서의 생태와 생태사회주의에서의 생태는 어떻게 다른가? 신좌파의 라콜로와 무프는 서구 자본주의사회에서 갈등의 다원성을 논하는 가운데 생태를 포함하면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이와 달리 생태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사상 안에 있으나 아직 설명되지 않았던 생태주의적 요소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적색과 녹색의 결합”으로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 또는 생태적 사회주의(ecological socialism)가 하나의 이론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와

⁶⁷⁾ Edward Newman, “Human Security,”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Studies*, Online, December 2017.

<https://doi.org/10.1093/acrefore/9780190846626.013.215>

관련한 논의를 제임스 오코너(James O'Connor), 폴 벌케트 (Paul Burkett), 존 벨래미 포스터 (John Bellamy Foster), 데이빗 페퍼 (David Pepper), 크리스 윌리엄스 (Chris Williams), 고헤이 사이토(Kohei Saito) 등이 이끌었다.

제임스 오코너는 생태운동(또는 환경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이론적 대화를 시도하였다. 또 그는 생태사회주의에서는 사회가 생태적으로 합리적이고 민감해야 하며, 생산수단과 정보 등이 민주적 통제 하에 놓여야 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 평화 및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와 노동이 탈상품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⁶⁸⁾ 오코너가 생태사회주의를 처음으로 정의한 셈이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에서는 토지사용과 노동분화가 자본가의 이윤 창출을 위해 종속되는 구조이며 여기서 생태 다양성이나 생태 보호 등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는 자연과 노동을 모두 자본화함으로써 생산 및 재생산의 사회적, 물질적 조건이 파괴적이 된다고 본다. 오코너가 노동과 생태를 병렬로 놓고 마르크스주의를 해석한 것에 대해, 이후의 생태사회주의자들은 그가 마르크스를 반생태주의자인 것처럼 오해받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크리스 윌리엄스는 오코너와 유사한 관점을 보이면서 자본주의가 왜 생태파괴 특히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는가를 설명한다. 윌리엄스는 “자본주의가 강제적으로 우리 자신과 지구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킨다. 자본주의체계는 효과적으로 지구를 더 많은 생산과 부의 축적을 위한 거대한 기계로 만들고 있다. 원료, 에너지, 노동자는 점점 더 많이 이익 창출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목에 쏟아 부어진다”고 말하면서, “생태파괴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생산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 즉

⁶⁸⁾ James O'Connor, *Natural Causes: Essays in Ecological Marxism*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p. 278.

인간과 자연의 상품화에 대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⁹⁾ 무제한 생산 및 축적의 자본주의적 욕구는 필요 이상의 양을 생산하도록 하는 만큼 낭비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해 낭비도 자본주의 구조 안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오코너와 윌리엄스와는 달리, 마르크스주의에 생태주의가 내재해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 폴 벌켓과 고헤이 사이토가 대표적이다. 먼저, 벌켓은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기반 하에서 이미 생태실천이 논의되었으며 자본주의의 생태파괴적 행위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제안한 마르크스의 기여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벌켓은 자연을 자본으로 보는 자본주의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결국 무질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자본주의 방식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생태파괴를 막을 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생태를 존속시키고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⁷⁰⁾

사이토는 그의 저서 『칼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Karl Marx's Ecosocialism*)에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연과학 및 생태에 관한 마르크스의 노트들을 바탕으로 생태사회주의를 설명하고 있다.⁷¹⁾ 사이토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마르크스·엔겔스전집』(*Marx-Engels-Gesamtausgabe, MEGA*)의 편집에 참여한 덕분이다.

사이토는 환경 또는 생태 위기의 근원을 인간-자연의 관계가 무너졌다

⁶⁹⁾ Chris Williams, *Ecology and Socialism: Solutions to Capitalist Ecological Crisis* (Chicago: Haymarket Books, 2010), p. 230, p. 234.

⁷⁰⁾ Paul Burkett, *Marx and Nature: A Red and Green Perspective* (Chicago: Haymarket Books, 2014) (originally published in 1999); *Marxism and Ecological Economics: Toward a Red and Green Political Economy* (Chicago: Haymarket Books, 2009).

⁷¹⁾ Kohei Saito, *Karl Marx's Ecosocialism: Capital, Nature, and the Unfinished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17), 추선영 역,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 (성남: 두번째테제, 2020).

는 마르크스의 설명에서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의 『파리 노트』에서 자본주의는 토지재산의 완전한 상품화를 추구하는데 이런 현실이 노동의 소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한다.⁷²⁾ 봉건사회에서 영주는 농노의 노동을 전유하며 토지를 사유화했던 한편, 농노는 영주에 대한 충성의 영주-농노관계는 인간적으로 “친밀한 측면”을 띠었다. 농노는 법적으로 비독립적이지만 토지를 통한 생산과정에서 자유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근대로 넘어오면서 “친밀한 측면”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토지가 상품이 되어 노동자와 토지의 관계가 자본가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재조직화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래 통합되어 있던 인간과 토지의 관계는 결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과 토지의 결별은 1858년의 『정치경제학비판요강』과 이후의 『자본론』에서 되풀이 된다. 인간과 토지의 재결합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협동농장은 노동(특히 임금농민의 노동)의 소외를 해결하여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과 토지의 “친밀한 관계”를 재구축해주게 된다는 것이다.

“적색과 녹색의 결합”을 요약되는 생태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생태주의적 해석으로서 의미를 지닌 동시에 자본주의적 경제가 생태파괴적일 수밖에 없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생태사회주의는 시장중심형, 소비중심형, 자원소모형, 리스크감수형 발전 및 생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에 동조하든 안 하든, 이 같은 비판의식은 기후변화와 생태파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72) 위의 책, 59-84쪽.

4. 보호책임론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개념은 인간중심 접근과 국가중심 접근 사이의 긴장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책임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발생한 주권 개념에 관한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되기도 한다.⁷³⁾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제시한 2009년 『보호책임의 적용』(Implementation of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호책임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모든 국가는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기본 책임을 지닌다. 둘째, 국제사회는 각 국가가 위의 네 가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양성하도록 돕는다. 셋째, 어느 국가가 명백히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할 때 국제사회는 위의 범죄를 방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결단력있게 행동할 책임이 있다.

보호책임 개념은 1990년대 중후반 르완다(Rwanda),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코소보 등에서의 대량학살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코피 아난(Kofi Annan)은 1997년 UN사무총장으로 임명되자 기존의 주권 개념이 인권적, 인도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간안보, 특히 “보호에 바탕한” 인간안보를 주창하던 캐나다의 로이드 액워시는 2000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를 개최하였고 이듬해 『보호책임』(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ICISS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을 주도하였다.⁷⁴⁾ 이 보고서는 보호책임과

⁷³⁾ 물론 이견도 있는 바, 보호책임의 연원을 주권 개념이 최초로 출현했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Luke Glanville, *Sovereignty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 New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관련해 개입을 보다 정당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보호책임과 관련한 개입이 주권의 침해는 아닌가, 국제사회의 책무로서 당연한지 아닌지 하는 논쟁을 낳았고, 특히 군사력을 이용한 인도적 개입과 관련 국제법 학계와 유엔에서 논쟁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2005년 UN이 개최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는 보호책임 논의의 분수령을 이루었다. 이 회의는 보호책임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모든 국가는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적 범죄 등 네 가지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즉, 결과보고서는 ICISS보고서와는 달리 네 가지 범죄에 한정하고 다른 인권유린 상황은 제외한 것이다. 결과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개입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38항과 139항에서 UN안보리가 인도적 개입을 승인하는 유일한 주체임을 밝혔다. 결과보고서는 “만일 평화적 방법이 부적절하고 해당국가 당국자가 네 가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명백하게 실패한다면, 우리들[정상회의 참가국들]은 시의적절하고 결단력있게, [UN]안보리를 통하여, 그리고 [UN]헌장 7장에 따라 집단적 행동”을 취한다고 명시하였다.⁷⁴⁾

2007년 부임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좁고 깊게”(narrow and deep)라는 구호아래 보호책임을 정책화하는 데 계기를 마련하였다. UN사무총장의 2009년 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호책임의 세 부분을 명확히 정

⁷⁴⁾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2001.

<https://www.idrc.ca/en/book/responsibility-protect-report-international-commission-intervention-and-state-sovereignty>

⁷⁵⁾ “2005 World Summit Outcome,” in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6 September 2005.”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generalassembly/docs/globalcompact/A_RES_60_1.pdf

의하였고, 2012년 보고서는 세 부분 모두 똑같이 중요하며 보호책임이 주권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강화시킨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각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지녀야 하고 그 능력을 키워야 하며 실패한 경우 국제사회의 개입이 있게 됨을 인식함으로써 주권 옹호를 위한 보다 명백한 지침을 갖게 되었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맥락에서 보호책임은 “주권의 친구”(ally of sovereignty)라는 표현하였다.⁷⁶⁾ 이후 매년 UN사무총장은 보호책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조기경보의 필요성(2010년), UN과 지역협력체와의 유기적 협력(2011년), 적시의 단호한 대응(2012년), 국가책임과 예방(2013년), 국제사회의 집단적 책임(2014년, 2016년), 지속적 적용(2015년), 예방의 의무(2017년), 조기경보와 조기행동(2018년), 예방을 위한 교훈(2019년), 여성 보호(2020년) 등 다양하다.⁷⁷⁾

보호책임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인도적 범죄를 차단하려는 규범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그 적용과정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먼저, 국제사회의 집단행동과 주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호책임에서 무력사용을 수반한 개입은 최후의 수단인데, 이런 경우라도 원래 의도한 보호책임을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주권까지 침해한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2011년 리비아 사례는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가 자국민에게 광범위한 체계적 폭력을 가하자 UN안보리는 보호책임을 인용하여 UN안보리결의안 1970을 채택하고 제재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 당시 상황을

76) Alex J. Bellamy,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Paul D. Williams, ed., *Security Studies: 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2013), pp. 488-497.

77) United Nations Office on Genocide Pre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sponsibility to Protect,”

<https://www.un.org/en/genocideprevention/key-documents.shtml>

언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곧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한 가운데 채택된 UN안보리결의안 1973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지상군 주둔을 제외한 필요조치 허용, 무기금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⁷⁸⁾ 그러나, 프랑스의 공습으로 보호책임의 실현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공습에 의한 민간인 피해 의혹이 제기된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NATO의 군사적 행동이 체제전환 목적으로 변질되어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였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주권 보호라는 명분아래 군사적 행동을 거부하게 된다. 2011년 시리아 내전과 관련, UN안보리에서 보호책임을 이유로 결의안 채택을 논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결국 시리아 내전은 보호책임이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더욱 격화되어, 지난 10년 동안 38만 명의 민간인 사망자와 난민 1천200만 명(국내 및 해외 포함)을 발생시켰다.⁷⁹⁾

보호책임의 주권 침해 여부에 관한 논쟁에서 핵심은 군사적 행동에 관한 것이며, 이를 둘러싸고 UN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UN이 보호책임 개념을 확립하고 정책화하는 데 중심에 섰으면서도 UN안보리가 보호책임과 주권이 충돌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책임과 주권의 상충은 단순한 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 간의 이해갈등 문제라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까닭에, 2021년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한 무차별적 시민살상에 대해 국제사회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것이다.

보호책임은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제노사이드,

7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73 (2011), adopted on March 17, 2011. [https://www.undocs.org/S/RES/1973%20\(2011\)](https://www.undocs.org/S/RES/1973%20(2011))

79) 김승욱, 「시리아 내전 10년」 『연합뉴스』, 2021.3.12.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1190600108>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적 범죄에 속하지 않는 상황, 예를 들어, 재난시 발생하는 비인도적 상황은 보호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가 보호책임을 행하지 못함은 물론 반인권적 방치를 한 경우에도 국제사회는 국가 주권이라는 명분 때문에 속수무책이 된다. 즉, 독재정권이 주권 보호를 이유로 자연, 사회, 의료, 기술 재난의 피해자들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인도주의 지원을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는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 또는 규범이 없다. 2009년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로 미얀마에 십만 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적 국제기구 요원들의 입국을 거부하였으며 국제사회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입국 승인을 기다려야만 했다.

5.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관해 체계적인 이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중심적, 인간중심적, 구조비판적 접근들이 혼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지구적,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들 세 접근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향후 연구 지평의 확장과 이론적 융합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지구적 문제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냉전 종식 직후이며, UN이 논의의 중심에 서서 선진국 및 개도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최초의 국제적 합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한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기후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통제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1997년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는 위의 협약을 시행하기 위해 교토의 정서(Kyoto Protocol to UNFCCC)을 채택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2005년에

의정서가 발효되어 참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로 교토의정서가 실행에 옮겨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전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였고, 중국과 인도는 개도국으로서 포함되지 않았으며, 캐나다, 일본, 러시아는 발효 이후에 탈퇴하였다. 이에 비해 2015년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정책적 의미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파리협정에는 196개 국가 또는 조직이 참여하였으며,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사회 이전 대비 2도 아래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⁸⁰⁾ 파리협정의 의의는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유럽연합 등 주요 당사자들이 협정에 비준하였으며, 2016년 11월에는 기후변화협정으로는 최초로 포괄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2017년 탈퇴하였다가 2021년 재가입하였다.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국가중심적, 인간중심적, 구조비판적 접근들은 각기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책을 밝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중심 접근에서 보면,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서 국가간 협력이 절실함은 물론 이 문제의 해결에 친화적인 국내정치적 여건이 중요하다. 인간중심 접근에서는, 기후변화협정이 인간안보에 부합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사회적 정의와 규범에 관한 논의가 절실하다. 또 구조비판 접근에서는,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는 산업화의 결과이며 동시에 소비를 촉진하는 자본주의에서 비롯되는 바,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 가지 접근이 이론적으로 융합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 첫째, 국가중심 접근에서는, 기후변화의 정치,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기후변화

⁸⁰⁾ United Nations, "The Paris Agreement," 2015.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english_paris_agreement.pdf

대응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는 아직도 중요한 연구주제로 남아있다. 민주국가 간 전쟁 부재는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력에서 민주주의의 영향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오늘날의 민주주의 모델인 참여·숙의민주주의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난다. 한 연구는 민주주의와 기후변화 대응 사이에는 비선형적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참여민주주의이든 숙의민주주의이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무한정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⁸¹⁾

둘째, 인간중심 접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인류가 접한 사회적 정의의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기후변화 정의(climate change justice)가 하나의 개념으로 부상하였다. 기후변화가 단순한 자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인위적, 사회적, 문명적 요소들과 결합한 산물인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격차 심화, 국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기후변화 정의는 이 같은 갈등과 차등을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⁸²⁾ 또한 인간안보를 위해 UNDP가 인간개발 지표를 만들어 저발전 사회의 기본적 욕구의 해결에 대응했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에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성과지표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조비판 접근, 즉 생태사회주의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의 속성 자체를 기후변화의 유일한 원인으로 파악하는 바, 이는 결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식은 아닐 것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도

81) 이재현, 「지구적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의 비성형성: 170개국 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9권 3호(2019), 199~228쪽.

82) 김현섭, 송지우, 주병기, 허은영, 「파리기후변화협정 하에서 한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시론」 『한국혁신학회』 14권 3집 (2019), 301~330쪽.

국도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양자관계는 공급사슬에 의해 연계성과 의존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생태사회주의는 친생태적 기술의 발전과 공유를 위한 대안적 제도를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기후변화와 관련해 세 가지 접근들이 경쟁적,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다면적인 지구적 문제이므로 대응도 복합적이어야 하는 바, 세 접근은 상호 경험적 분석과 비판적 대안을 수용하고 결합하는 노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V. 결론

이 글은 칸트, 톨스토이, 마르크스의 사상들에서 비롯된 세 접근을 중심으로 평화학의 진화과정과 계보를 분석하고, 오늘날 평화학이 복합화하는 경향을 살펴보았다. 다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주로 서구의 대표적인 사상가나 이론가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본 결론에서는 평화학의 진화에 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국가중심적, 인간중심적, 구조비판적 접근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평화학 내에서의 전문성(expertise)을 높이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각 분과학문은 학문적 성격에 따라 세 접근 중 하나를 통해 평화적, 비평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경향을 띠며, 따라서 각각의 현상이 분절화되어 보이기도 하고 편파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다학제적 학문으로서의 평화학의 한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평화학이 더 발전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전문성 차원에서 보면 각 접근은 분석적, 경험적 설명의 수준을 높여 주었음에 틀림없다. 칸트의 연방과 공화정에

관한 논의는 안보공동체론 및 민주평화론 등으로 발전하였으며,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는 적극적 평화, 인간안보, 인간개발이라는 개념으로 거듭났으며, 마르크스주의는 다원적인 사회운동을 설명하며 생태주의와 융합하고 있다. 각기 다른 접근의 개별성과 독창성은 다차원적이며 심화된 분석의 틀을 제공해주는 데 기여하였다. 각 접근은 인식과 이념에서 상이하지만 지구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각 접근은 경쟁하면서도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들을 탐구하고 있다. “지구적 갈등 문제의 경쟁적 접근”에서 전문성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에서 말한 전문성의 이점을 감안하면서도, 갈등과 평화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 또는 복합적 인식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평화학은 냉전 시대의 분업화된 양상에서 벗어나 각 접근 사이의 개방과 결합으로 새로운 개념과 이론이 생성되고 있다. 평화학은 이제 복합성의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복합화 노력이 최종적이거나 성숙된 것은 아니며, 각 접근의 경계를 초월한 논의가 지속되고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책임의 예를 들어보자. 보호책임은 국가중심 접근과 인간중심 접근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개념으로, 특히 주권의 책임성과 보호 대상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결과로 탄생하였다. 보호책임은 냉전 종식 후 국가에 의한 폭력 또는 국가 내 집단 간 폭력 갈등에 관한 복합적 문제의식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보호책임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발전에 중견국가와 UN이 기여한 점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보호책임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리비아 내전시 보호책임이 UN안보리에서 인용되어 무력사용을 포함한 인도적 개입이 행해졌지만 주권 침해와 시민 희생의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서는 보호책임이 인용되지 못했다. 보호책임은 최종

수단인 무력사용 부분에서 논쟁적인바, 강대국들이 보호책임의 실현을 방해하는 스포일러이다. 보호책임이 성과를 거두려면, UN헌장 7장 무력사용과 관련한 해석을 중심으로 심화된 논의가 진행되고 특히 강대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합적 평화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전체론적(holistic) 사고를 가지고 사건이나 현상의 사이클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반(反)아사드(al-Assad) 시위로 촉발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로 들어보자. 내전은 1,200만 명의 난민을 낳았고, 이는 유럽에서 난민에 대한 반감을 초래했고 특히 영국에서는 이로써 브렉시트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인도적 개입에 관한 논의를 둘러싼 미, 중, 러, 유럽 간 이해대립의 와중에,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는 국가를 선언하고 등장하였으며 쿠르드 소수민족의 거취와 관련 터키도 분쟁당사국이 되었다. 즉, 초기 시위의 원인 제공자였던 아사드 독재체제는 그대로 존속한 채, 내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쿠르드족 문제, 천연자원의 정치화, 유럽의 국내정치, 강대국 정치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초래하였다. 전체론적 관점에서 시리아 내전의 사이클을 보면, 각 주체의 역할(아사드정권, 반정부조직, 강대국, UN)과 분석대상의 다양성(난민, 소수민족, 자원, 인도적 개입, 보호책임) 등이 드러난다. 전체론적 사고는 복합적인 갈등의 해결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암시해 줄 수 있다.

평화학은 가치에 관한 연구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공존, 신뢰, 소통, 공정, 법치, 화해, 통합 등의 가치가 평화 또는 갈등과 관련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이 같은 가치는 평화학 연구가 아니더라도 타 분과학문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이들 가치가 평화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기도 하며, 갈등 예방과 해결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실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바, 평화학은 가치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평화학의 보편성 추구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성과 보편성의 결합은 천을 날줄과 씨줄로 짜야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북한 인도주의와 인권이라는 주제는 개발을 통한 인권 접근을 통해서 분석해보기도 하고, UN 결의와 국제법에 근거한 논의에 개입하기도 하며, 이행정의에 관한 다양한 화해적 접근에서 제기되는 개념들과 연계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특수성과 보편성의 결합에 의해 탈북자 연구도 난민 연구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자의 사이클을 보면, 북한 이탈의 기획으로부터 월경을 거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용국가에 도달하며 적응 또는 부적응의 과정을 거쳐 때로는 제3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탈북자의 사회계층적 배경 및 탈북 동기는 체제 내의 문제에 해당하지만, 경계선상에서의 인권침해와 경로국가들의 대응은 인도주의와 난민관련 법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주제이다. 여기서 인간안보와 경로국가의 주권이 교차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수용국가 내에서의 적응은 문화적 정체성과 인간개발의 차원의 주제로서, 난민이나 이주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다. 탈북자 연구는 기존 접근과 난민 연구와의 보완성, 상충성을 살피면서 이론적 수정을 가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서의 평화학은 일반화를 추구하는 학문적 임무에 충실하고 방법론을 통한 학제적 소통이라는 소명에 따름으로써 성과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 접수: 2021년 7월 19일 / 심사: 2021년 8월 3일 / 게재확정: 2021년 8월 4일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되에링, W. O. 김용정 역, 『칸트철학 입문』, 서울: 중원문화, 2012.
- 이문영, 『톨스토이와 평화』,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6.
- 칸트, 임마누엘, 백종현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한 철학적 기획』, 파주: 아카넷, 2013.
- 톨스토이, 레오, 박형규 역, 『전쟁과 평화』, 서울: 범우사, 1997.
- 톨스토이, 레프, 박문재 역, 『톨스토이의 고백록』, 파주: 현대지성, 2018.
- Acharya, Amitav,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EAN and the Problem of Regional Order*, London: Routledge, 2009.
- Acharya, Amitav, *Constructing Global Order: Agency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 Adler, Immanuel, and Micheal Barnett, eds.,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Boulding, Kenneth E., *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 Boulding, Kenneth E., *The Economics of Peace*, London: Michael Joseph Ltd., 1946.
- Burkett, Paul, *Marx and Nature: A Red and Green Perspective*, Chicago: Haymarket Books, 2014, originally published in 1999.
- Burkett, Paul, *Marxism and Ecological Economics: Toward a Red and Green Political Economy*, Chicago: Haymarket Books, 2009.
- Buzan, Barry, and Lene Hanse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Deutsch, Karl,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Perspectiv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Deutsch, Karl, *The Nerves of Government: Models of Communication and Control*, New York: Free Press, 1966.
- Fine, Ben, *Marx's Capital*, London: Macmillan, 1989.
- Gallie, W. B., *Philosophers of Peace and War: Kant, Clausewitz, Marx Engels and*

- Tolsto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Glanville, Luke, *Sovereignty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 New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 Graef, Julian, *Practicing Post-Liberal Peacebuilding: Legal Empowerment and Emerging Hybridity in Liberia*,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5.
- Harari, Yuval Noah,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London: Harvill Secker, 2015.
- Inglehart, Ronald,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Laclau, Ernesto, and Chantal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 1985.
- MacFarland, Neil S. and Yuen Foong Khong, *Human Security and the UN: A Critical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 McLellan, David, ed., *Karl Marx: Selected Writi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Miliband, Ralf, *Divided Societies: Class Struggle in Contemporary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Roberts, David, ed., *Liberal Peacebuilding and the Locus of Legitimacy*, London: Routledge, 2015.
- Senghaas, Dieter, *Dieter Senghaas: Pioneer of Peace and Development Research*, Heidelberg: Springer, 2013, Kindle Edition.
- Singer, Peter, *Marx: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Snyder, Jack, *Myths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 Solingen, Etel, *Regional Orders at Century's Dawn: Domestic Influences on Grand Strate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 Suri, Jeremi, *Power and Protest: Global Revolution and the Rise of Deten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 Tolstoy, Leo, *The Spiritual Works of Leo Tolstoy* (Prague: e-artnow, 2016) (trans. by Leo Wiener, Constantine Popoff, Louise Maude, Aylmer Maude, V. Tchertkoff, Nathan Haskell Dole), Kindle Edition.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Williams, Chris, *Ecology and Socialism: Solutions to Capitalist Ecological Crisis*, Chicago: Haymarket Books, 2010.

김범수, 「칸트의 자유개념과 평화론」 『국제정치논총』 59권 3호, 2019, 7~54쪽.

김성철, 「냉전기 핵통제 인식공동체의 형성」 『평화학연구』 14권 1호, 2013, 29~52쪽.

김성철, 「신뢰」, 김성철 · 이찬수 편,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117~144쪽.

김승욱, 「시리아 내전 10년」 『연합뉴스』, 2021.3.12.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1190600108>

김태균, 「한반도 전략적 평화를 위한 시론」, 김태균 외, 『한반도 평화학: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현섭 · 송지우 · 주병기 · 허은녕, 「파리기후변화협정 하에서 한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시론」 『한국혁신학회』 14권 3집, 2019, 301~330쪽.

박명규, 「지금 왜 평화인문학인가」, 서울대학교 평화인문학연구단 편,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13.

사이토 코헤이, 추선영 역,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 성남: 두번째테제, 2020.

서보혁, 「요한 갈통의 평화인권론」 『통일과평화』 4권 2호, 2012, 185~196쪽.

신육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2권 2호, 1998, 147~168쪽.

이재현, 「지구적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의 비성형성: 170개국 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9권 3호, 2019, 199~228쪽.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50권 2호, 2010, 35~64쪽.

Alker, Hayward R., "The Powers and Pathologies of Networks: Insights from the Political Cybernetics of Karl W. Deutsch and Norbert Wiene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7, no. 2 (2011), pp. 354-378.

- Axworthy, Lloyd, Knut Vollebaek, Stein Kuhnle, and Sorpong Peou, "Introduction: Human Security at 20—Lysøen Revisited,"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vol. 2, no. 2 (2014), pp. 143-149.
- Bellamy, Alex J.,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Paul D. Williams, ed., *Security Studies: 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2013, pp. 488-497.
- Boulding, Kenneth E., "Twelve Friendly Quarrels with Johan Galtung,"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14, no. 1 (1977), pp. 75-86.
- Dalton, Russell J., "The West German Party System between Two Ages," in Russell J. Dalton, Scott C. Flanagan, and Paul Allen Beck, eds.,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Realignment or Dealig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104-133.
- Doyle, Michael W.,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1,"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2, no. 3 (1983), pp. 205-235.
- Doyle, Michael W.,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2,"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2, no. 4 (1983), pp. 323-353.
- Galtung, Johan,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7, no. 3 (1990), pp. 291-305.
- Galtung, Johan, "Only One Quarrel with Kenneth Boulding,"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4, no. 2 (1987), pp. 199-203.
-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1969), pp. 167-191.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2001.
<https://www.idrc.ca/en/book/responsibility-protect-report-international-commission-intervention-and-state-sovereignty>
- Laclau, Ernesto, and Chantal Mouffe, "Post-Marxism without Apologies," *New Left Review* I/166 (Nov/Dec 1987).
<https://newleftreview.org/issues/i166/articles/ernesto-laclau-chantal-mouffe-post-marxism-without-apologies>
- Moravcsik, Andrew, "The New Liberalism," in Christian Reus-Smit and Duncan Snidal, eds.,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234-254.

- Newman, Edward, "Human Security,"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Studies*, Online (December 2017).
<https://doi.org/10.1093/acrefore/9780190846626.013.215>
- Peou, Sorpong, "The Limits of Potential of Liberal Peaebuilding for Human Security,"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vol. 2, no. 1 (2014), pp. 37-60.
- PRIO, "Inspiration from a Father: Johan Gatung Interviewed by Henrik Urdal," posted May 15, 2019.
<https://blogs.prio.org/2019/05/inspiration-from-a-father-johan-galtung-interviewed-by-henrik-urdal/>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5 World Summit Outcome" i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6 September 2005.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generalassembly/docs/globalcompact/A_RES_60_1.pdf
- United Nations Office on Genocide Pre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sponsibility to Protect,"
<https://www.un.org/en/genocideprevention/key-documents.shtml>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73 (2011), adopted on March 17, 2011.
[https://www.undocs.org/S/RES/1973%20\(2011\)](https://www.undocs.org/S/RES/1973%20(2011))
- United Nations, "The Paris Agreement," 2015.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english_paris_agreement.pdf
- Williams, Michael C. and Iver B. Neumann, "From Alliance to Security Community: NATO, Russia, and the Power of Identit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9, no. 2 (2000), pp. 357-387.

The Evolution of Peace Studies: Origins, Approaches, and Complexity

Kim, Sung Chul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hilosophical origins of peace studies and to uncover the path of its development. The paper shows that the thoughts of Immanuel Kant, Leo Tolstoy, and Karl Marx represent a state-centered approach, a human-centered approach, and a structure-critical approach, respectively, and have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evolution of peace studies today. All three approaches share the ultimate pursuit of human life and dignity, but they differ from one another in terms of epistemology and the subject matters of peace and conflict. The state-centered approach based on Kant's theory of peace, conceiving the state to be the main actor, sees its main tasks as preventing wars between states and protect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ince the Cold War era, when Kenneth Boulding and Karl Deutsch discussed the concept of community to ensur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tates, the state-centered approach has formed an important current of peace studies today. The precursors' concept of the security community has been succeeded by a group of constructivist scholar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human-centered approach based on Tolstoy's idea of non-violence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peace studies since the Cold War period,

when Johan Galtung presented such concepts as positive peace, structural violence, and cultural violence. In the post-Cold War era,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became prevalent after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presented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The structure-critical approach, which is rooted in Marx's critique of capitalism, has paid attention to changes in the structure of conflict—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capitalism. During the Cold War, the New Left attributed contradictory social relations not only to the class structure but also to differences over issues such as human rights, nuclear technology, and ecology that emerged along with the rise of post-materialist values. With the thawing of the Cold War, Marxists presented ecosocialism by combining Marxism (red) and ecology (green). The above-mentioned three approaches practiced a division of labor in the Cold War, but afterwards they have become incrementally interconnected and combined. Examples of the so-called complex peace studies are found in such concepts as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and peacebuilding, and in the three approaches' engagement in the debates about the climate change issue.

Keywords: Kant, Tolstoy, Marx, state-centered approach, human-centered approach, structure-critical approach, complex peace studies

김성철 (Kim, Sung Chull)

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국제안보, 평화학을 연구해 왔으며, 최근 저서로는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2020), 『Partnership within Hierarchy』(2017),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Entering the New Era of Deterrence』(2017), 『재난과 평화』(2015), 『State Violence in East Asia』(2013) 등이 있다.